

Russia Policy Review  
ISSN 2586-100X

2018  
Vol.2 | No.1 Spring

# Russia Policy Review

러시아 폴리시 리뷰

북한의 유화적 행보와 한반도 대립 완화  
중국 대외정책의 新개념  
신(新)북방정책과 신(新)동방정책, 현실적 접점 찾기  
대선 이후 러시아 : 문제점과 향후 발전 시나리오  
인도와 아세안 : 새로운 협력 단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산  
중국 : 당 대회, 그 후  
2017년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남북대화 제안의 감춰진 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 : 현황과 교착상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  
동남아시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 러시아의 시각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Russia Policy Review

## 2018

Vol.2 | No.1 Spring

『러시아 폴리티시 리뷰』는 러시아의 시각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내의 국제문제 및 정책 연구자들에게 러시아의 시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방향성, 전문성, 확장성을 지향하는 선별된 자료를 소개해주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발간하는 정책저널이다.

Russia Policy Review

통권 제4호 2018년 3월 30일 발행

발행인 /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편집인 /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편집 및 운영위원 /  
바실리 미헤예프(MEMO)  
강덕수(한국외국어대학교)  
김석환(한국유라시아연구소)  
김현택(한국외국어대학교)  
손성환(前주스웨덴 대사)  
홍완석(한국외국어대학교)  
황성우(한국외국어대학교)  
번역위원 / 서유경(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처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러시아연구소  
주 소 /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전 화 / 031-330-4852  
팩 스 / 031-330-4851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us.or.kr>

디자인·편집 / (주)이훤디앤비(02-2254-4301)  
인쇄인 / 송용수  
인쇄처 / (주)이훤디앤비  
ISSN 2586-100X  
비매품

※ 본 잡지의 내용을 허가없이 무단전재하거나  
재배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북한의 유화적 행보와 한반도 대립 완화

올레그 다비도프 | 3

중국 대외정책의 新개념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 6

신(新)북방정책과 신(新)동방정책, 현실적 접점 찾기

홍완석 | 22

대선 이후 러시아: 문제점과 향후 발전 시나리오

안드레이 라보프 | 30

인도와 아세안: 새로운 협력 단계

나탈리아 로고주나 | 35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산

올레그 다비도프 | 39

중국: 당 대회, 그 후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 42

2017년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세르게이 루코닌,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 | 46

남북대화 제안의 감춰진 의도?

올레그 다비도프 | 53

북한 핵·미사일 문제: 현황과 교착상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

올레그 다비도프 | 55

동남아시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러시아의 시각

예브게니 카나예프 | 66

# Russia Policy Review

## 러시아 폴리시 리뷰

북한의 유화적 행보와 한반도 대립 완화  
중국 대외정책의 新개념  
신(新)북방정책과 신(新)동방정책, 현실적 접점 찾기  
대선 이후 러시아 : 문제점과 향후 발전 시나리오  
인도와 아세안 : 새로운 협력 단계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산  
중국 : 당 대회, 그 후  
2017년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남북대화 제안의 감춰진 의도?  
북한 핵·미사일 문제 : 현황과 교착상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  
동남아시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 러시아의 시각

이 저널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362-2009-1-B00005)

# 북한의 유화적 행보와 한반도 대립 완화

올레그 다비도프

한반도 상황이 예기치 않게 180도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도 이 같은 전환은 있었으나 길게 지속됐던 적은 없었고, 결국 시간이 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갑자기 평화적 행보를 취하고, 이에 뒤이어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한이 관계 회복에 나서고, 긴장과 적대심을 낮춰 정치·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처럼 유화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그가 집권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사실 바로 직전까지도 남북한 관계는 극도로 냉각된 상태였다. 늘 그랬듯이, 김정은 위원장은 그 모든 책임을 한국의 친미(親美) 쪽두각시 정권과 외세로 돌렸다.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사절단의 일행으로 한국에 온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하

며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을 초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사를 전달했다.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남북관계 정상화, 남북통일을 위한 준비 논의이다. 한국은 북한의 제안을 즉각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 그 중간 단계로서 문 대통령의 답신을 전달할 특사단을 평양에 파견하기로 했고, 그 결과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을 방문했다.

남한 특사단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북한의 은둔자'를 면담하는 일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 특사단을 장시간 만난 사실은 2011년 12월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 있는 일로서, 사실상 그가 외국 사절단을 처음으로 접견한 것과 다름없었다. 반나절 동안 만남 후에 도출된 합의 내용은 그저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및 북미관계 정상화 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

다고 밝힌 점이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곧이어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과격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미 대화에 앞서서 어떠한 사전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나마 유일한 조건은 동등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핵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의 양국 정상회담을 직접적으로 암시한 개연성이 크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의 위협이 있는 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더불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미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은 물론이고 호주까지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완성하고 보유 핵의 숫자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로도 한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귀국 후 방북 특사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2018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이미 말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논의할 여지도 없다. 과거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한결 같이 북한에 대한 공격훈련으로 해석한 것을 감안하면 정말로 매우 놀라운 발언임에 틀림없다.

남북한 간 가장 중요한 의제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그것도 판문점 남측 구역에서 회담을 갖는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최초로 북한 정상이 남한을 공식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남북 정상 간 ‘긴장완화를 위해 협력

을 도모하고 필요한 경우 비밀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남북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받는 당사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최소한 남북관계에서 대외 돌파구를 마련했고 실질적인 북미대화의 중재자가 됐기 때문이다. 방북 특사였던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를 보고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귀국 즉시 특사 자격으로 방미 길에 올랐다. 주된 목적은 미국을 설득해 대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북미대화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북한에 대한 불신의 뿌리가 아주 깊은데다가 무엇보다 북한이 전략적 수단을 너무 쉽게 바꾸려 한다는 측면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이번 회담에 대해서 한국과 전적으로 동일한 평가를 내리지 않고, 그저 남북한 양측이 상호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였다고 평가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한 고위관리는 미국이 북한과 지난 27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 경험을 갖고 있지만, 북한 측의 연속된 기만술로 단 한 차례도 실패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미 군사정보국장도 이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로버트 에슬리 미 군사정보국장은 북한의 핵 잠재력은 그들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그렇게 쉽게 핵무기 포기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의 지도부가 자국의 경제와 재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면서까지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대량학살무기와 운반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핵을 추상적인 ‘안전보장’을 대가로 포기하겠다고 하

는 것은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에게도 아주 이상하게 비쳐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향대로 금년 5월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결국 북한이 본심을 드러냈고, 그런 까닭에 이 시기를 잘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이 대화에 동의한 것은 중요한 전제 조건, 즉 미국은 북한이 명확하고 확고한 목적, 다시 말해서 완전하고 입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도달한다는 조건하에서만 대화에 응한다는 것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여전히 의심은 남아있다. 최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에서 다수의 인사들은 북한 지도부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야당의 주요 주장은 설사 북한이 평화의 올리브관을 내민다고 해도 북한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2000, 2007년)때 일시적으로 관계가 안정됐을 뿐, 이후 심각한 대립상황에 이를 정도로 관계가 후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지루한 협상으로 끌어내는 또한번의 기만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수수께끼 같은 셈법에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많이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북한이 무엇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이다. 사실 그간의 경험을 통해보면 북한은 그 누구에게도 대가없는 선물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직설적으로 말해, 미국에게 어느 정도 양보해(핵무기 양도 문제가 북한 지도부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실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한 것은 만약 회담이 개최된다고 해도 진지한 회담이 아닌 두 모험가들의 논쟁을 보게 될 것이고 예측컨대 매우 초라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란 점이다. 추론의 근거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담당 전문가의 준비없이 정상회담에서 직접 논의된다는 사실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예만 들어도 충분하다. 과거 실패로 끝난 6자 회담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검증 문제를 논의하던 중 교착상태에 빠져버렸다. 당시 북한은 비밀로 하려던 문제들이 미국의 철저한 검증 시스템으로 인해 폭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 바 있다.

결국 (북미간 대화가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된다고 할지라도)문제는 일어난다. 과거 북한의 비핵화의 길에 ‘암초’가 더해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해보자. 과연 어떤 단계에서 과거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것인가.

번역 :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jh9905@danm.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Мирное наступление Пхеньяна: приведет ли оно к ослаблению конфронт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3.13)

# 중국 대외정책의 新개념

알렉산드르 로마노프

2012년 가을, 당 최고 지도부가 교체된 다음 이후 최근 5년 동안 중국 대외정책은 눈에 띄게 변화했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선포하고 그 계획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에 착수했다. 국제질서의 메커니즘을 재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강력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정책을 점점 더 확실히 그리고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개념을 표현하는 중국 지도부의 발언도 신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2013년부터 중국은 대외정치 분야에서 기존의 입장을 쇄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 현상은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의 발언 속에 잘 드러난다. 중국은 자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커감에 따라 대외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몇 년 동안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신형 대국관계,' '운명공동체,' '이익과 정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이라는 말과 용어는 중국을 넘어 세계 곳곳의 대중매체 속에 확산되면서 이해와 활용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제적 잠재력을 신장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상호 연관된다. 2008~2009년 세계 금융 위기는 전환점이 됐다. 그 이후 중국경제는 선진국들이 주춤하고 있을 때 높은 성장 속도를 유지했다. 이런 점은 중국이 '대국(大國)'으로서 자국의 역할, 다시 말해서 세계발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글로벌 문제에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자극했다. 서구가 만든 세계경제 질서가 불안정하고, 그 결과 중국의 발전이라는 장기적 이해를 보장할 수 없음이 드러난 후, 중국은 국내문제에 집중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익숙한 배역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 2010년 중국은 GDP에서 일본을 추월하였으며 세계 두 번째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



했다. 그 후 중국 내에서도 대외정치 분야에서 새로운 접근법들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더 뚜렷해졌다.

중국 대외정치가 노정하고 있는 현재의 변화를 지연된 현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넬리 노셀트(함부르크, 아시아연구소)는 ‘냉전’이 종식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꼼꼼하게 재검토할 필요는 없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중국은 냉전 종식 훨씬 이전인 1970년대에 이미 미국과 관계정상화를 추진했다. 소련해체 이후 직면했던 여러 국가들의 모습들과는 달리, 중국은 1989~1991년 사건들, 즉 동유럽의 변화와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던 사건들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도 동맹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나서지도 않았다.

그런데 이 견해가 모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전환기에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했고 그것은 향후 러시아와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서방국가의 관계는 기존의 반반하게 다져진 길을 따라 2008년 세계위기 때까지 계속 진행돼 왔다는 의견은 설득력 있다. 노셀트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08년 세계위기를 미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징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게임의 규칙을 설정하는데 좀 더 본질적인 역할을 획득할 기회로 받아들였다. ‘국제질서를 중국의 경제력이 신장하는 것과 연계해 해석하는 것은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에서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역할이 점진적으로 변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서는 이런 변화들이 이

미 일어나고 있다. 2015년 말 ‘첸민 지바오’ 통신은 사설에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도식화해 보여줬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마오쩌둥의 시대 30년 동안 중국의 외교정책은 ‘1.0 시대’의 논리를 따랐다. 이후 덩샤오핑이 주도한 개혁개방 시기 중국의 외교정책은 ‘2.0 시대’의 논리, 다시 말해서 외부세계와 접촉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통합을 추구했다. 중국이 세계 질서의 한가운데서 국제문제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참여자이자 건설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설정하는 시기인 현재, 중국의 외교정책은 ‘3.0 시대’의 논리로 이행하고 있다.

중국 외교정책 ‘3.0 시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중국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국제문제를 해결해가려는 포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중국은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외국의 압력에 저항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모토로 삼았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당시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이용됐던, ‘중국은 No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은 불만이 있다’ 등과 같은 표현 속에 잘 나타난다. 특히 중국 사회를 하나로 결집시키려는 애국적 민족주의의 배경 속에서 이와 같은 정치적 표제어들은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된다. 피터 페르디난드(영국, 워윅 대학)는 20여 년 전 중국 애국주의자들 대부분이 ‘No’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고 지적한다. 반면 지금은 “오바마와 말레이시아 전(前) 수상 마하티르 무하마드를 모델로 삼아, 중국 애국주의자들은 ‘중국은 할 수 있다, 중국은 승리할 수 있다, 중국은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서구의 ‘중국책임론’에 대한 비판은 힘을 잃

고 있다. 과거 중국 지지자들은 세계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별로 기여하지 않는다는 서방의 정치평론가나 전문가들의 불만을 중국으로 하여금 건디기 힘든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경제발전에 매진하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적인 ‘책략/속셈’으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국제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책임 문제는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물론 중국은 세계문제에 얼마만큼 기여/개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서구 선진국의 요구에 맞춰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서구권 여러 나라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또한 자국의 이익을 따져 결정할 것은 자명하다.

## 전략에 기초한 적극성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인 2012년 말 주도적인 공식이데올로기로 자리 잡은 것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사회적 역량을 집결하도록 요구하는 ‘중국몽(中國夢)’이다. 중국 측은 이런 ‘꿈’의 실행이 외부세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반대로, 중국이 강력하고 풍요로운 국가로 변화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이런 점에서 중국은 인류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다는 논리를 편다.

2013년 1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시진핑은 대외정책을 이끌어갈 새로운 핵심이데올로기를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시진핑은 ‘전략적 사고를 강화하고’, ‘전략 수립 능력을 키우자’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중국 정치평론가들은 중국을 둘러싼 대외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놓고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려 한다고 해설했다.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향후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대비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중국이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이 추구하는 ‘합당한 규칙’과 ‘핵심 이해’를 언급하면서 이를 희생하는 경우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천명했다. ‘그 어떤 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핵심 이해를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주권·안보·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쓰디 쓴 열매를 스스로 삼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하한선,’ 즉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적이고도 공식적인 입장표명이다. 시진핑의 말에 따르면, 무슨 일에서나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도록 즐기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비한다면 중국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

2013년 10월, 주변외교정책 회의에서 시진핑은 ‘분발유위(奮發有爲)’를 호소했다. 이 표현은 이후 새로운 중국 외교정책의 중심사상이 됐다. 분발유위가 갖는 의미는 실로 대단하다. 덩샤오핑은 1990년대 초에 절제와 신중함으로 표상되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을 유훈으로 남겼다. ‘냉정하게 관찰하고,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며, 절제된 형식으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되, 자랑삼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소박함의 전술을 발휘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선두에 나서지 않는다.’ 중국에서 이러한 ‘능력과 가능성의 은폐’ 노선은 공식적으

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외교정책에서 '분발유위'는 적극적이며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서 주변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살펴려는 전략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적극적 행동전략은 정치 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된다.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중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설립이 결정됐다. 국가안전위원회는 국내외 정책을 조정하는 임무를 맡으며 '국가안전 분야에서 중심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책임을 진다. 국가안전위원회가 맡은 책임은, 국가안전 전략의 개발과 수행, 상응하는 입법절차 준비, 국가안전 분야와 관련한 정치노선 연구, '국가안전을 위한 중요문제 연구와 해결'이다. 당 중앙 국가안전위원회는 당·국가지도부가 외교안보기관들과 더욱더 효과적으로 상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 그리고 외교안보기관들이 학술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진핑이 수장으로 있는, 당 중앙 국가안전위원회는 주로 국내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들은 대외정치 분야에서 국가안전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당 중앙 국가안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에 정치국 상무위원을 임명하고 동시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문제 지도부 부의장직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 외교부장을 부주석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방안도 언급한다. 이 역시 외교부장의 지위를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격상시켜야 가능하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중국 건국 초기부터 현

재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주요 외교관이 차지했던 지위는, 최고 고위직이었던 총리(주은래)와 원수(천이)에서 부주석을 거쳐 국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점차 낮아졌다. 1998년 이후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에 단 한 번도 선출되지 못했다. '중국 외교부를 담당하는 수장의 정치적 지위가 격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다.'

중국이 대외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하면서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됐다. 2013년 4월 시진핑이 선언한 '중국 특색 신형연구센터' 설립 발의는 전략적 연구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이다. 연구센터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 핵심권력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 엘리트들과 학문적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소프트 파워'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상층설계(頂層設計)

중국 지도부는 '상층설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자주 언급한다. 상층설계의 개념은 국내경제 개혁과 관련해 처음 사용됐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강을 건너는' 식의 과거 경험에 근거한 경제개혁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2013년 '일대일로'가 발의된 후 대외정책과 대외경제관계 분야에서 복합적 '설계'의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2016년 4월 28일 러시아 외교부 장관 라브로프와 회담 중에 시진핑은 양국 관계발전에서 '상층설계'와 '상위비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지도부 차원에서 행동을 조율하자는 중국 측 입장은 중국 현대정치

맥락 하에서 살펴봐야만 한다.

중국은 ‘상층설계’ 능력을 이미 보여줬다. 2015년 봄 ‘일대일로’를 달성해가려는 전략적 이니셔티브 초기 단계에서 5개 요소를 근간으로 하는 복합적 설계도가 제안됐다. 5개 요소는 경제동맹·운송회랑·개발지구 등을 설립하면서 중국의 정책과 다른 나라의 결정이 점점에 이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 운송 인프라를 연결하기, 무역발전, 금융관계의 활성화 등이며, 마지막 요소는 ‘민심 상통’ 즉 인도적 차원에서 관계 발전이다.

2017년 5월 15일 ‘일대일로 정상포럼’에서 시진핑은 이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이제 ‘일대일로’는 ‘안보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뜨거운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는 등 ‘평화의 길’이 돼야 한다. 생산, 금융, 인프라 등 여러 분야의 산적인 과제들은 상호 협력해 ‘번영의 길’을 추구해 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국제무역과 투자의 법칙들이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개방의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숫자 경제, 인공지능(AI), 나노기술, 양자 측정기술 분야에서 공동작업을 요하는 ‘혁신의 길’이다. 인문 분야에 대한 관심은 ‘문명의 길’이라는 개념,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명은 장벽과 갈등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 해야 한다는 논리 안에 투영된다.

연구자들은 ‘일대일로’를 달성해가려는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할 때 적용되었던 ‘기능적 접근’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국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공동의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창설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

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협력의 정치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창설 계획안과 일대일로의 전략적 이니셔티브가 서로 다른 측면도 있다. ‘대와 로’를 연결하는 운송인프라가 통합된다 하더라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국의 산업투자는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덕에 각국은 갈등 예방에 좀 더 주력할 수 있는 동기가 마련된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유럽에서 그랬듯이 민족주권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중국 스타일의 통합 또는 ‘아시아적’ 통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가까운 미래에 가시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帶)와 로(路)’의 건설 계획들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런 계획안들은 경제와 사회영역뿐만 아니라 안보와 안전보장의 문제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경제·사회·안보 등을 단일한 통합프로그램으로 결합하는 능력은 대외정치 분야에서 중국의 잠재력이 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이것은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국가들에게는 자극이자 동시에 도전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참여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각국은 자신들의 경제적 여건과 정치적 상황을 촘촘하게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 신형 국제관계

국가주석 직에 오른 후 시진핑은 첫 해외순방지로 러시아를 선택했다. 2013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국제관계대학(МГИМО)에서 연

설했다. 그곳에서 그는 ‘협력과 상호이익을 핵심으로 하는 신형 국제관계를 수립’하자는 자신의 이상을 천명했다. 이러한 생각은 변모하고 있는 중국 대외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신형 국제관계’를 설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상호적 중미관계를 바탕으로 ‘신형대국관계’를 상정했는데, 중국의 해석에 따르면 ‘충돌과 대립을 피하고 존중과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상호이익을 보증하는 것’이 신형대국관계의 핵심이다.

러시아는 현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대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려 한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러시아는 굳이 이러한 의지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다. ‘신형대국관계’를 통해 중국은 대결 분위기를 축소/배제하려는 태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현 러·중 관계에서 대결 분위기는 없다. 양측은 과거의 불화와 반목에서 벗어나 소·중 정상화에 힘입어 1980년대 말에 이미 대화를 재개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다방면에 걸쳐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젠 친한(싱가포르, 로얄할러웨이 런던대학교)과 손 브레슬린(영국, 워위크 대학교)은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중국 특색의 G2’라고 지칭했다. 미국과 중국이 ‘G2’라는 주장은 2010년대 중반 미국 전문가집단 내에서 등장했다. 그러나 ‘세계 공동통치’라는 이념을 중국은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지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2009년 중국 지도부는 다극체제 하에서는 아무리 최강국이라 하더라도 두 강대국만으로는 세계발전이라는 난제에 대처할 수

는 없다는 이유로 세계 공동통치 이념을 거부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설정 문제를 능동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G2’의 경우에서 보다 훨씬 더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대외정책의 기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경에서 있었던 ‘틸러슨 사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2017년 3월 18일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기 직전 미국 국무장관 티러슨은 미·중 사이에 ‘대결과 갈등을 없애고 항구적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결정을 모색하려는’ ‘매우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렉스 티러슨의 이러한 발언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개념에 내재된 4개 요소를 문자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이것은 티러슨의 얕은 지식을 드러낸 것일 수도 있고,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이 양보해 이제 미·중이 가까워질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일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티러슨의 단어 선택이 곧 미국이 중국의 입장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혀서는 안 된다. 더구나,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티러슨의 발언 태도가 ‘중국식’이었다고 맹비난하면서 이는 변명의 여지없이 중국에 양보한 것이며, 상호 이해와 존중은 결국 아시아에서 중국의 중재능력이 상승한 반면 미국의 위상은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의 목소리를 높였다.

###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직면한 중국과 미국

미국은 ‘신형관계’ 개념을 수용할 리가 없다. 왜냐하면 국제질서의 맹주 자리를 양보할 의향

이 없으며 동등하게 중국과 그것을 나눌 생각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 다시 말해서 신흥 강국으로서의 중국과 세계에서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 패권강국’으로서 미국 간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진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른 아테네가 기존 강국 스파르타에 불러일으킨 두려움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음을 상기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다가올 충돌가능성에 주목했다. 새로운 저서 《예정된 전쟁: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에서 앨리슨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신흥 강대국이 패권 강대국을 압박하며 위협할 때, 위협은 바로 우리 앞에 있음을 만방에 알려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만약 양측이 그것을 방지하는 지난하고도 고통스러운 행동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군사적 충돌로 향한 길 위를 걷고 있는 셈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논의할 때 서구 전문가들은 현실적·군사적·정치적 문제들에 역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레고리 무어(중국, 노팅엄대학 닝보캠퍼스)는 ‘함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원인들을 분석했다. 무엇보다 먼저 신뢰의 부족이다. 이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은 중국의 권위적인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고, 중국은 미국을 자신을 견제할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냉전’의 헤게모니를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측은 미국의 아태지역 ‘회귀’ 정책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부재하다. 중국은 이 정책을 ‘견제’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미국은 ‘재균형(Rebalance) 정책’ 또는 ‘위험 분산(hedge) 정책’이라고 말하기를 선호한다. 계속해서 그레고리 무어는 중국의 해양정책, 사이버안보에 대한 양측의 이견,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과 미국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전략’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 강화, 중국과 미국의 국방비 격차 감소(2012년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 국방비의 18.7%였으나 2015년은 24.4%에 달했다) 등을 미·중 충돌의 또 다른 원인들로 지적한다.

고대 그리스역사의 교훈을 중국 정치계는 빠르게 받아들였다. 2015년 9월 시애틀에서 시진핑은 “세계에는 그 어떤 ‘투키디데스의 함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대국 간에 또 다시 전략 판단의 오류가 발생한다면, 강대국들은 스스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시진핑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신뢰와 이해가 더 많이 축적되어야 한다는 것, ‘세 사람이 우기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잘못된 헛소문에 속아서는 안 되는 점,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끼던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이웃집 아이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의심하자 이웃집 아이의 걸음걸이나 안색이 도끼를 훔친 사람의 그것과 같아 의심스러웠으나 어느 날 잃어버린 도끼를 우연히 발견하자 이웃집 아이의 행동에서 도끼를 훔친 사람 같은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다’는 《여씨춘추(呂氏春秋)》의 고사처럼 헛된 의심을 해서도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주변 세계를 보는 선입견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시진핑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며

중국 측 전문가들은 부상하는 ‘신흥 강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존 강국’ 간 불가피한 충돌에 대한 테제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한다. ‘투키디데스 함정’에 연연하는 것은 서구 정치학과 국제관계이론(헤게모니, 현실주의, 균형이론 등)의 낡은 개념 탓이라는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만 하고, 협력·조화·다양성과 같은 중국 측 함의들을 국제관계의 논리 속에 병합시켜야만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미국 대외정책을 ‘기저부터 다시 보자’는 중국의 태도는 오랜 기간 서구가 독점해 왔던 가치에 대한 논의로 쟁점을 옮겨간다. 논의의 초점은 1950~1980년대처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세계의 경향들을 재빨리 파악하지 못하는 미국의 뒤쳐진 태도, 다시 말해서 ‘냉전’ 사고방식에 여전히 사로잡혀 중국과 동등한 상호관계에 동의하지 못하는 미국의 태도에 맞춰져 있다. 중국은 경제·군사 영역에서 미국 주장의 근거를 현대세계와 어울리지 않는 미국의 복고적 시각 탓으로 축소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논쟁을 위한 새로운 맥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 중국의 주변국 외교정책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주변국과 상호관계를 발전시켜가자는 논의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런 변화는 중국 대외정책을 더욱 균형 있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과거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과도하게 집중한 나머지 주변국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밀려났었기 때

문이다.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 왕지쓰(王緝思)는 2012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점점 더 강해지면서 중국은 자국이 점점 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왕지쓰는 그 원인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중국 정책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측 연구자들은 강대국으로서 중국이 향후 번영을 위해서는 ‘전략적 후방’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접경 지역’을 강대국들과의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정책의 중요 요소로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줄일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교정책을 한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大國) 외교정책’과 ‘주변국 외교정책’이라는 두 대외정책을 중요도 측면에서 대등하게 다루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주변국 외교정책’은 중국의 국내발전계획과 연관된다. 2013년 10월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의 주변국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두 개의 백 년’ 목표,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완성하고,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민주적이고 문명화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수행한다는 달성을 위한 노력과 연결돼 있다.

그 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를 4자의 한자, 즉 ‘친(親)(친밀함-친족성)’, ‘성(誠)(성의-진심)’, ‘혜(惠)(자비-혜택)’, ‘용(容)(포용-관용)’으로 처음 제시했다. 중국의 전통적 윤리 개념을 활용함으로써 중국과 주변국이 ‘친밀하고 인간적이고 선한’ 관계를 수 세기 동안 맺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윤리적 가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따라서 이러한 윤리적 가치 위에 구축된 대외정책이 얼마나 견고할 것인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시진핑은 평등에 기초한 선린과 상호윈조 정책을 지지하고, ‘감정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며,’ ‘민심을 얻고 위로할 수 있는 더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인접국가가 중국에 대해 ‘더 우호적이고 더 친밀하며 더 많은 이해와 더 많은 지지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견지하자고 호소했다.

2013년 3월, 시진핑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의 관계를 ‘정(正)(정직-공명),’ ‘시( 현실성-실용성),’ ‘친(親)(친밀성-친족성),’ ‘성(誠)(성의-진심),’ 이렇게 4자로 규정했다. 이는 접경국가들과 중국의 상호관계를 이끌어가는 기본 틀에 비하면 내용 면에서 1/2 수준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서 ‘혜택’과 ‘포용’은 이웃에게만 해당되며, 멀리 있는 파트너에게는 ‘정직’과 ‘실용성’에 근거한 협력방안이 추진된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시진핑은 ‘운명공동체’ 구축과 관련한 생각을 여러 번 언급해왔다. 중국 최고권력자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세안, 접경국가 등을 모두 아우르는 ‘운명공동체’ 이상을 설파했던 것이다. ‘아시아 운명공동체,’ ‘아시아-아프리카 운명공동체,’ ‘중국과 아세안 운명공동체’라는 표현들이 연이어 등장했고, 최근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핵 안보 운명공동체’의 이념이 나타났다. 중국이 쓰고 있는 ‘운명공동체’라는 이념의 기저에는 상호관계를 이끌어가는 규칙에 대한 공동 논의와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려는 태도, 그리고 동반자관계·공개성·포용·문화다양성·발전의 다면성 등을 지향하려는 태도 등이 깔려 있다. 중국이 발표한

글들을 보면, ‘운명공동체’란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상호관계의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려 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복합적 협력을 진전시키려 한다는 두 가지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이라는 슬로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신형 국제관계’ 수립은 이러한 방향과 밀접히 얽혀있다.

###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

과거 중국 전문가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서구 개념에 매우 조심스런 태도를 취했다. 그들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내정 간섭을 정당화하려는 논리로 파악하거나, 서구의 비호를 받으면서 민족주권보다 상위에 국제기구를 세우려는 요구를 정당화하려는 시도 등으로 접근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에서 보고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긍정적 맥락으로 사용된 이후 상황은 변화했다.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중국이 이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은 정치적 간섭의 논의보다는 경제문제에 집중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념을 이해한다. 글로벌 경제발전, 다시 말해서 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공동으로 제거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를 지키고 글로벌 문제에서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명목으로 세계금융·경제구조에서 자국의 역할을 강화하려 한다.

2016년 중국은 글로벌 경제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중국 플랜’을 밖으로 표출/제안하기 시작했다. 항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무역·투자 분야에서의 자유화, 다시 말해서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자고 호소했다. 시진핑은 ‘시대와 더불어 전진한다,’ ‘지식과 행동을 통일하자,’ ‘함께 건설하고 함께 이용하자,’ ‘한 배에 탄 사람들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등과 같이 중국식 어휘로 G20 활동이 우선시해야 할 노선을 정리하면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식 접근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논의할 때 중국은 ‘공동 논의, 공동 건설, 공동 이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것은 중국이 자국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며, 협력의 새로운 규칙들을 논의하는 데서부터 그 계획을 실현하는 것까지 전 과정을 파트너들과 함께 할 준비가 돼 있고 그 결과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다.

항주 ‘G20’ 회담이 끝난 직후인 2016년 9월 27일에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집단학습이 열렸다. 이것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중국 지도부의 관심 한 가운데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었다. 시진핑은 ‘G20’ 회담 이후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자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바다, 극지, 인터넷, 우주공간, 핵 안보, 반부패 투쟁,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영역에서 규범을 수립하는 데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 관련해 중국은 투자·무역·경제 문제의 범위에서 점점 더 멀리 벗어나고 있다.

## 이익과 의무 사이

시진핑은 과거의 역사와 전통이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시의적이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명한 목적성을 갖고 중국 정책의 ‘재중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 중국 정치의 어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전통문화의 이미지나 현인(賢人)들의 고사를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외정책도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연계돼 다뤄진다. 2014년 11월 대외정책 문제 중앙회의에서 시진핑은 ‘중국은 고유한 특징을 가진 강대국 외교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다’고 밝혔다. 대외정책에 ‘중국식 외형’을 부여하려는 노력은 ‘중국 특색 대국외교관계’, ‘민족적 이해를 고수하기 위한 중국식 방법’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민족적 특징을 추구하는 노선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현대 대외정책을 전통문화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과거를 인용하는 것은 중국 외교정책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견 가능하게 한다. 또한 외교정책에 확고한 가치 기반이 존재함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하다.

국제 관계, 특히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의무와 이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설정하자고 시진핑은 말했다. 여기서 의무와 이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란 ‘이익’(利)보다 ‘의무·정의’(義)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는 초기 유교사상에서 비롯된 생각이다. 중국 전통에 따르면, 의무 이행은 높은 도덕성을 가진 ‘군자(君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고, 이에 비해 이익 추구는 ‘소인’의 속성이었다.

‘의무’와 ‘이익’의 관계에 대한 2013년 시진핑의 논평은 세계발전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공평과 불균형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의무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사회주의 국가의 사상을 반영한다. 이 세계에서 일부 사람들은 너무 잘 살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너무 못 살고 있는데 이는 좋지 못한 현상이다. 모두가 기뻐하고 공동의 행복일 때 그것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전체 함께 발전해 가기를 희망하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신속하게 발전하기를 염원한다. 이익은 상호이익과 공동 이득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나는 이겼고 당신은 졌다’는 것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모두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의무는 힘이 닿는 한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익이 아니라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며, 이익을 버리고 의무를 취하며,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익만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시진핑은 또한 다음을 지적했다. “주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의무와 이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견지해야만 한다. ... 그래야만 사업을 잘 완수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다. 중국에 대해 장기간 우호적이며 자국 발전의 위대한 과업을 이룬 주변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측의 이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야 하며, 물을 끌어오기 위해 이웃의 밭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가에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이렇듯 과거를 인용하는 것은 중국 외교부장의 기조발언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의무와 이익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중국 외교정책의 핵심적 관점’으로 수용함으로써 높은 이데올로기

적 위상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말 중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육성/실천하기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직업 충실, 신용, 친절’이라는 12가지 기본내용을 설정했다. 그러나 대외정책을 국내 이데올로기 사업과 결합시키려는 시도는 이후 전개되지 못했다.

‘의무-정의’ 준수와 도덕 의무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나 아프리카에 투자할 때 환경보호 요구나 현지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 했다는 서구 연구자들의 평가가 잘못된 것임을 알리려는 목적을 갖는다. 동시에 견고한 가치 기준을 가진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는 전방위적 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의무’라는 유교 개념은 서구의 ‘혜계 모니 질서’와 ‘강자의 권리’를 중국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중국은 ‘제로섬 게임’을 거부하고 공동의 이익 획득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논거의 하나로 활용된다.

전통적인 중국의 예절은 상호 의무체계 속에 구축돼 왔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 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君君臣臣父父子子, 논어 12편 11장)’라는 공자의 말은 각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역할과 각자의 행동 유형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법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관계와 가족 관계 체계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중심’과 ‘주변’의 상호관계로까지 이런 도식을 확장하는 것은 풍요로운 중국이 이웃의 번영을 배려하는 호의 있는 ‘중심’으로서 행동할 것이며, 그 대담으로 이웃은 중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고 중국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정한다. 여기서

중국이 지지하는 다극화 곧 국제관계의 평등과 민주화라는 사상과, 강력한 ‘중심’과 ‘중심’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주변’ 관계라는 전통적 비대칭 모델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선포한 ‘운명공동체’의 창설을 다른 나라는 발전 전망을 통일하고 이해를 합치시키는 것으로 인식한다. 2013년에 이미 시진핑은 ‘중국몽과 함께 ‘운명공동체’ 이념을 수립했다. 그는 ‘중국의 꿈이 주변 민족들의 꿈과 상호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천명했다. ‘선전과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몽과 주변국 인민들이 바라는 최상의 삶이 상호 연결돼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이 주변국에 뿌리를 내리도록 중국몽과 주변국 지역 발전 전망이 상호 연결돼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성명을 통해 중국은 중국몽에 대한 주변국의 긍정적 여론을 이끌어내려 한다.

중국은 ‘협력과 공동 이익’이라는 슬로건의 기저에 전통적인 사상이 자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교문화는 무엇보다 다양성의 조화를 중시하고, 중국이 이러한 유교문화 전통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현대 세계에서 ‘공동의, 복합적인, 협력에 기반 한, 견고한 아시아적 안보’를 구현하는 과정, 경제의 ‘공동 발전’을 도출하는 과정, 그리고 모든 문명의 ‘위대한 통일’의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을 중국이 주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서구문화는 이런 목표들을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분쟁적이라고 상정된다.

## 고대사와 현대정치

‘민심 상통’을 실현하기 위해 자국의 사상과 가치를 주변국에 투영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주변국이 중국의 국력강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평화애호정책이 중국 전통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식민지 침략으로 강력한 경제력을 획득한 서구국가의 길을 중국은 결코 따르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시진핑은 신시대에 중국이 격동과 전쟁의 100년-19세기 중반 아편전쟁의 패배에서 20세기 중반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을 거쳤지만, 이를 빌미로 다른 나라와 민족에 복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한다. 중국인은 평화를 존중한다. 왜냐하면 격동을 경계하고 안정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보석처럼 조화를 대하라,’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사해는 동도다’ 등의 중국의 전통적인 금언들은 이 테제를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

이런 흐름에 따라 중국의 대외정치를 평가할 때도 역사적 소재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논의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됐다. 연구자들은 중국이 팽창정책을 펼친 적은 있지만 그것은 17세기-18세기 ‘이민족’ 왕조인 만주의 ‘청’의 통치시기에나 그랬던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다. 나머지 전 기간 동안 중국은 극도의 준엄하고도 ‘부드러운 힘’을 소유했으면서도 이웃 국가를 식민지화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천하대동 사회’가 역사적으로 형성됐으며 그 안에서 중국은 ‘관리는 했지만 다스리지는 않았음’을 제시한다.

과거 『뉴욕 타임즈』 상하이 지사를 이끌었던 미국 저널리스트 하워드 프렌츠는 『하늘 아래 모든 것: 과거는 어떻게 중국이 글로벌 파워를 향한 꿈을 꾸게 만들었는가』라는 책에서 중국식 역사 해석을 비판하면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팍스시니카(Pax Sinica)로 알려져 왔던, 중국이 주변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본질을 그는 다음과 같이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의 우월권을 받아들이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해 주고,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며, 현대 국제관계에서 공동선이라고 알려진 가치들을 제시할 것이요. 공동선의 가치에는 공해(公海)에서의 질서 수립, 분쟁 중재, 유교에 기반 한 중국식 통합체계에 가입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요.”

이런 작업들을 고찰하면서 미국 국제관계협의회 아시아연구소 소장 엘리자베트 에코노미는 자국 역사의 ‘탈식민화’ 작업에 매진하는 중국의 노력이 중국의 높아진 위상과 관련된 현대 논쟁에서 중요한 부분이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학자들과 관리들은 평화를 애호하고 불간섭과 탈식민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다른 강대국과는 다르다고 습관적으로 주장한다. 마치 자국의 증가하는 군사력에 대한 염려는 아예 흔적조차 지워버리려는 듯하다. 그러나 프렌츠가 지적했듯이 이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 모든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선포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슬로건은 세계질서에서 과거 강력했던 시절에 상응하는 위치를 다시금 획득하려는 중국의 희

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서구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맥락 하에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평화를 사랑해 왔고, 선의를 베풀어왔다는 규범적 주장을 폐기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주변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맺어온 관계를 되짚어보자는 논의는 대단히 정치적이며, 오늘날 국제정치 문제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깊이 있는 이해가 결여된 상태로 논쟁자들의 입장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러시아의 입장에서 중국사를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이 현재 동북아에서 러시아가 어떤 정책을 펴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이성과 감성을 위한 투쟁

공식 외교석상에서 시진핑은 다른 나라의 여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왜냐하면 ‘국가관계는 인민들 사이의 친밀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대외적으로 ‘중국사를 이야기하고,’ ‘중국 목소리를 전달하는’ 과제를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해외순방 시 그가 연설할 때면 으레 ‘중국사를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이야기꾼’으로 시진핑을 비유한다. 이 과정을 통해 시진핑은 중국 발전 모델의 정통성과 평화애호 태도를 선명하게 각인시키려 한다. 그의 이야기 중 몇몇은 심지어 중국 학술지에서 ‘이론’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신발론’은 2013년 봄 러시아 국제관계대학(MGIMO)에서 행했던 시진핑의 연설에서 나온 말이다. 중국 지도자 시진핑은 사람은 그 자신만이 자기 발에 신발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말할 수 있듯이, 외국인들이 아닌 바로 그 민족만

이 특정 발전모델이 자기 민족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차와 맥주론’은 2014년 4월 시진핑의 브뤼셀 연설에 등장했다. 시진핑은 중국인은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하지만 벨기에인은 맥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며, 사람들은 삶을 기뻐하며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는다고 언급했다. 이런 차이들이 다양성을 구성하며, 그런 점에서 중국과 유럽문화는 평등하다고 말했다.

브뤼셀의 같은 연설에서 나온 ‘굴나무론’은 “굴나무가 회하 이남 지역에서는 굴나무로 자라지만 회하 이북 지역에서는 탕자나무로 자란다”는 고대 중국의 고사를 이야기한 것이다. 시진핑은 서구모델이 중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임을 지시하기 위해 이러한 고사를 인용했다.

‘사자론’은 나폴레옹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한 것이었다. 2014년 3월 중-프 수교 50주년 기념 파리 연설에서 시진핑은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로 지칭했으며, 사자가 깨어나면 세계가 전율할 것이라고 한 말을 상기시켰다. 그런데 시진핑에 따르면, 지금 사자는 깨어났지만 위협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이 사자는 ‘가까이 다가가도 되는 온순하고 문명화된 사자’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외부세계에 자국의 이념을 투영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상을 ‘외국인들이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정치 개념을 가장 적합하게 번역/소개하는데 이전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몽’이란 합성어는, 그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의 꿈’이 아니라 ‘중국

인의 꿈’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중국인의 꿈’으로 번역해야 중화민족이 전통적으로 바라는 기대와 꿈의 의미가 보다 뚜렷해지기 때문이다. ‘신형대국관계’를 ‘new type of major power relationship’로 번역하는 것은 power라는 말이 힘의 정치나 헤게모니즘에 대해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 ‘신형대국관계’란 서구의 ‘힘의 논리’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거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new model of country relationship’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 덩샤오핑의 ‘자신의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다(도광양희 韜光養晦)’를 ‘hide our capacity and bide our time’이라고 번역한 것은 더 많은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중국의 권위자들은 부정확한 번역에는 ‘나쁜 의도를 갖고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중국을 호시탐탐 비난하려는 미국 군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확신한다.

### ‘원-원’을 찾아서

중국은 20세기 초 외교관 류정산이 했던 ‘약소국에는 외교정책이 없다’는 말을 자주 떠올린다. 그 말은, 약했던 중국이 자국의 대외 정치적 이해를 주장하지도 못했었고, 강대국들과의 정의로운 관계를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것에 대한 쓰디쓴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기할 능력이 없는 약한 국가로서 자국을 인식하려는 타성을 오히려 극복해야 할 때이다. 시진핑이 선포한 ‘4개 자신감(四個自信)’ 정책(중국특색 사회주의노선·이론·제도·문화)은 자국의 잠재력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신감을 높이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

로는 대외정치 분야와도 연계된다.

“선전과 정치적 수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의 공식적 언술 태도를 눈여겨보아야 하는데, 중국과 중국 지도부의 커져가는 야심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것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규율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학과 국제관계이론뿐만 아니라 중국학도 요구된다.

중국 대외정책 담론에 고대사와 문화의 주제들이 자주 등장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중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정치학자들은 중국 고대어, 전통사상, 문학, 철학 등 여러 분야의 중국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수 세기 동안 축적된 중국 관련 학술전통을 반드시 유지/보존할 필요가 있다. 전통 중국학과 현대 중국연구에서 숙련된 선임 연구자들을 보유한 나라일수록 중국의 대외정책을 더 깊게 파악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전적 사실주의는 현대 중국정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중국 정치체계의 특징적 구조, 다시 말해서 정치의 기저에 놓인 역사적-문화적 기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셀트는 이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중국은 앞으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계속 힘을 키워갈 것이며, 이는 과거 독일과 일본이 자국의 국력이 강화되면서 저질렀던 잘못된 행태를 떠올리게 한다는 잘못된 예측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런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문화의 특징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

다양한 인과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 대외정치 분야의 신개념 대부분은 주로 집권 첫 해인 2013년에 행해진 시진핑의 연설에서 비롯됐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포르타코프 박사는 2016년 중국은 자국의 대외정치 노선을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시진핑이 특별히 공헌했음을 적극적으로 선전했다고 밝혔다. 오랜 시간 사용되지 않던 ‘당 핵심’이라는 칭호를 2016년에 시진핑이 차지한 것을 보면 중국 정치가 최근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개인숭배에 기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안젤라 포와 리민창(싱가포르, 난양공대)은 공동저서에서, 중국의 제안과 성명을 무조건 의심하고 반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불안정성의 확률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대신에 ‘상호호혜 협력’이라는 정치적 수사에서 그 말의 문맥과 의도를 중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은 ‘책임 있는 선의의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주며, 강대국 간의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피하게 만들어준다.

가치관들의 차이는 표면적이고 낙후된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한다. 자국의 시각에서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동양의 ‘권위주의’와 서구의 ‘자유주의’ 투쟁이나 ‘선진 사회주의’와 ‘반동 자본주의’의 싸움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은 함께 세계를 건설하자고 말하는 것이며, 그 세계 안에서는 블록화도 없을 것이고, ‘올바른’ 가치들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도 않을 것이며, 세계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경쟁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제로섬 게임’ 대신에 ‘윈-윈’이 자리

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국제문제 연구자들인 보스크레센스키, 콜두노바, 키레예바(국제관계대학)는 지정학적 대결을 연구하는 것 대신에 현대 정치학의 중심 주제는 평화체제의 정착과 평화체제의 내구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 호혜적이며 건설적인, 지역공간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지역정책연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외정치 분야에서 중국의 변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대부분 국제관계에 관한 서구모델의 결점을 비판하는 논리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 개념들에 통일성이 부족하다

는 것을 크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개별 발의안과 이념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복합이론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집권 후에 시진핑은 이런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진핑의 집권이 끝나는 2022년 즈음, 변화된 중국의 대외정책 개념이 명확하게 구조화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본다.

※ 본 논문은 2017년 7월 15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와 글로벌 문제 분과 전체 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발전시킨 것이다.

번역: 김은희, 한국외국어대 강사  
loveruli@hanmail.net

· 알렉산드르 로마노프(A. V. Romano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원제: Новые Концепции Китайской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 출처: Азия и Африка сегодня, No. 12 (2017.11) 통권 705호

# 신(新)북방정책과 신(新)동방정책, 현실적 접점 찾기

홍완석

## 1. 왜 신(新)북방정책인가?

신북방정책. 2017년 5월 출범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21세기 팍스코리아나(Pax Koreana) 시대의 개막을 준비하기 위해 북방의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핵심 국정과제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sup>1)</sup>은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에서 전개되고 있는 거대한 조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외교적 조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20여 년에 걸쳐 국제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역동적인 지정학적 무대가 등장하고 있다.<sup>2)</sup> 유라시아 공간에서 이른바 ‘신대륙주의’(New Continentalism)<sup>3)</sup>라 불리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한 것이다. 오랜 기간 해양세력에 압도되었던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등 대륙의 신흥 경제대국들이 세계무역과 투자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면서 등장한 신조어다. 터키의 ‘범 투르크연대’,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카자흐스탄의 ‘광명의 길 프로젝트’,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북방의 동서남북(東西南北)에서 각개약진 하던 열

1)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신북방정책의 주요 목적은 북한을 포함한 북방의 유라시아대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장기적인 평화협력환경을 주도적으로 조성하는 가운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구체적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이해정·이용화,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통권 701호(현대경제연구원, 2017. 9. 4).

2) “국제 정세 변화의 중심, 유라시아를 주시하라,” 『연합뉴스』, 2013년 6월 11일.

3) 이 용어는 2012년 켄트 E. 칼더 美 존스홉킨스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센터 소장이 냉전 이후 유라시아의 광대한 대륙에서 전개되는 지정학적 동학의 급속한 변화 양상을 포착해, 이를 분석하고 설명한 저서 ‘신대륙주의’에서 차용한 것이다. Kent E. Calder, *The New Continentalism - Energy and Twenty-First-Century Eurasian Geopoli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강들이 에너지와 교통, 무역을 매개로 통합을 모색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 점점 더 정치경제적으로 응집되어가는 현상을 일컫는다. 말하자면 13-14세기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 시대 이후 북방에서 ‘오래된’ 세계가 ‘새롭게’ 재현되고 있는데, 유럽형 세계체제가 유라시아형 세계체제로 복구되어 가는 형세다.

유라시아 대륙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런 거대한 변화 추세를 켄트 칼더(Kent E Calder)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동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은 2012년 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신대륙주의’의 출현으로 규정한다. 냉전 종식 이후 대륙 국가들의 급속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철도, 파이프라인, 고속도로,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실크로드 시절 이후 서로 전혀 연결되어 본 적이 없는 광대한 북방의 개별국가들이 긴밀히 접촉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국제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이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sup>4)</sup>

현하(現下) 한국도 이 ‘북방지역’에서 발원하는 변화의 조류에 적극적인 동참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외교적 화법으로 표현한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도 신대륙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한국은 물리적으로 단절된 북방지역과 물류와 교통로, 에너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유라시아 대륙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2. 신북방정책의 지정전략적 의미

해방이후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은 대륙으로의 출구가 봉쇄된 외로운 ‘고도’(孤島)였다. 남북한 분단의 인질이 되어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접근 통로가 차단되었기에 섬 아닌 섬으로 남아있었다. 냉전기 미·소의 양극적 패권경쟁이 초래한 남북한의 분단과 침체한 군사적 대립의 지속은 한반도 남쪽을 철저히 대륙과 격리시켰다. 그 결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른바 반도적 ‘랜드브리지’(land bridge)로서의 지정학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채 국가적 번영의 명운을 해양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sup>5)</sup>

그런데 시간의 경과와 함께 오랜 기간 잠자고 있던 유라시아 대륙이 거대한 용틀임을 하면

4) 강태호, “푸틴의 동방외교와 극동개발의 국제정치,” 『투코리아』, 2016년 7월 7일. <http://2korea.hani.co.kr/426248>.

5) 홍완석,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국제화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국제지역연구』 제8권 1호(2004), p. 4.

서 세계 정치경제 질서의 새로운 ‘기관차’가 되어가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신 북방시대가 펼쳐진 것이다. 전기(前記)한 바처럼 대륙의 신흥 경제대국들이 교역을 매개로 물류와 교통, 에너지 네트워크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면서 통합을 모색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만 동북아의 귀퉁이에서 마냥 고립의 섬으로만 남아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북방지역과의 인위적인 분절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신대륙주의 시대가 제공하는 경제적 번영과 민족적 웅비의 기회를 잘 포착해 현재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방지역 내부와의 유기성을 복원하는 가운데 지정학적, 지경학적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자면 분단으로 반감된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동력과 모티브를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서 찾아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바로 이것이 신북방정책이 태동한 중요한 배경일 것이다.

지정전략적 맥락에서 신북방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전략 2.0에 해당한다.<sup>6)</sup> 미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지난 세기의 해양중심 발전 전략을 토대로 러시아, 중국, 인도, 중앙아시아, 몽골 등 유라시아대륙 국가들과의 협력의 지평을 새롭게 넓히는. 그럼으로써 경제성장과 민족번영의 ‘기회의 창’을 여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요컨대 신북방정책은

기존의 해양중심 국가발전 전략에서 해양과 대륙을 동시에 아우르는 해륙 균형지향 국가발전 전략, 즉 ‘해양-대륙 복합화 전략’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sup>7)</sup>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신북방정책은 탈냉전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활용하면서 주체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외교적 ‘표식’ 전환이고, 나아가 신대륙주의 질서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이 독자적 또는 주도적 게임 참가자가 되겠다는 야망의 발로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그들의 시선과 압력을 끊임없이 의식해야만 하는 숨 막히는 세계관을 과감히 극복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중국의 경제 율타리에도 간혀있지 않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도 무한정 편승하지 않겠다는 심오한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sup>8)</sup> 한반도에서의 냉전적 대결구도를 주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한 어조로 천명한 소위 ‘한반도 운전자론’이 이의 적절한 반영일 것이다.

### 3. 신북방정책, 21세기 국가적 웅비의 ‘기회의 창’

지경학적 측면에서 신북방정책은 한국의 경제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속에도 반영되어 있다. 말하자면 단절된 대륙과의 물류, 교통, 에너지 연결

6) 역대 한국정부의 북방정책은 한국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을 위한 평화와 안보 강화와 더불어 유라시아 대륙진출이라는 두 가지 핵심목표를 추구해 왔다. 김태환, “신 북방정책”으로서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신 지정학적 접근’의 외교전략적 함의,” 『주요국제문제연구』, 2014-33(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09.30), p. 7.

7) 원동연, “한국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연계협력 방안,”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제주평화연구원, 2017. 12. 15).

8) “유라시아 1만 4400km 질주하는 ‘한국夢,’” 『동아일보』, 2015년 7월 15일.

망의 복원을 통한 시장의 확대, 한반도 경제권의 확대를 추구한다. 유로-아시아의 광대한 지역이 점차 통합되어 가는 신대륙주의의 출현과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조응은 21세기 한국에게 다양한 '기회의 창'을 열어준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한다. 심각한 내수침체와 투자위축에 저출산·고령화·복지수요 급증 현상이 맞물리면서 한국경제가 장기저성장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한다. 점차 식어가는 성장엔진을 되살리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에서 세계 인구의 75%인 45억 명이 살고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60%를 차지하며 중국, 인도, 러시아, 터키 등 신흥 경제대국과 자원 부국들이 몰려 있는 유라시아는 저성장·저투자 늪에 빠진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유라시아는 한국 상품의 거대 시장으로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원으로서, 디지털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실크로드로서, 중동을 대신하는 건설·플랜트시장으로서 위촉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정리하면 북방의 유라시아 대륙은 식어가는 한국경제를 되살리는 신 성장 공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절감했듯이, 한국경제가 중국경제에 종속되어가는 것을 예방하는 '대안시장'으로서의 가치도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라시아의 통합성이 증대되면 그것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통일 기반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북-중-러 접경 지역에 초국경 국제경제특구(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를 설립하는 방안이나 이미 세 차례 시범 운송에 성공한(2014.11/2015.4/2015.11) 남-북-

러 삼각협력 복합물류운송사업(나진-하산 프로젝트)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북방의 유라시아는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중견국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밖에 한국문화의 융성과 한류의 확산, 잃어버린 옹혼한 대륙적 정체성의 회복, 해외 청년일자리 창출, 해외식당기지 건설, Korean Diaspora와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경제영토 확대 등의 기회도 부여한다.

#### 4. 신북방정책 중심 '축'으로서 러시아

신북방정책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통일·외교정책의 핵심 축으로 그 성공여부는 러시아와 가장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미·중의 권력투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그 사이에서 한국 외교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런 외교적 딜레마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한국외교의 자기 주도성과 독자성을 고양시켜주는, 다시 말해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어주는 우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가 신동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접근전략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권력구도에 세력균형자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고, 한국 외교의 새로운 '선택지'로서 제3의 출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국이 북방의 신대륙주의 조류에 합류하는 '입구'이자 '통로'이다. 신대륙주의 질서 형성의 핵심인 교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가 러시아 극동에서 한반도를 향해 뻗혀 나갈 채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신북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러 접근의 강화와

## 유라시아 경제공동구역



함께 적극적인 경험의 확대가 필요하다.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의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즉 '남·북·러 가스관 연결', '전력망 연계', 'TSR-TKR 연결사업과 남·북·러 삼각 물류협력' 사업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신뢰구축을 전제로 하기에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유익한 환경도 제공한다. 아울러 러시아가 주도하는 시베리아-극동 지역의 에너지개발과 석유·가스관 부설,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망 구축, 동북아를 잇는 전력망 수퍼 그리드 사업, 북극항로의 개척과 이용 등은 역내 이해 당사국 간 다자적 대화와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틀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중요한 기회 공간이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러시아는 2017년 기준 세계 6위 외환보유국(4,316억 달러)으로 GDP 1조 4,639억 달러의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구의 대러 제재와 국제유가의 폭락이 시작되었던 2014년 이전까지 러시아는 세계 3위 외환보유국이었고 GDP 세계 7위 경제대국이었다. 러시아의 경제규모와 발전 잠재력은 한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고, 특히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경제현대화와 사회간접자본시설 재정비 및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은 우리 기업에 더 많은 시장진출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2015년 러시아의 주도로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도 한국의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다. 러시아를 포함해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는 약 1.8억 명의 인구와 GDP 2.1조 달러, 무역액 1조 달러의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4.4%, 가스 생산량의 20%, 석탄 생산량의 6.4%를 차지하는 자원부국으로서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라시아 경제권이다.<sup>9)</sup> EAEU가 공동체 내

9) 이근화, 제현정, "하나의 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주목하라!' "Trade Brief", No. 42 (한국무역협회, 2015), p. 2.

에서 상품, 자본, 노동,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역외국가에 대해 공통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단일 시장으로 출범함에 따라 한국은 EA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면서 교역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 5. 러시아 극동,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의 교차로

현재 푸틴의 러시아도 신동방정책(New East Asia Policy)<sup>10)</sup>을 통해 아시아로의 국가발전 중심축 이동을 모색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과의 지경학적 협력 강화를 희구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2012년 5월 중앙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이례적으로 신설했다. 동년 9월에는 영토의 동쪽 끝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2013년에는 철도, 에너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무려 약 381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는 ‘극동·바이칼지역 경제사회개발 프로그램 2025’를 채택했다.<sup>11)</sup> 2013년 8월에는 극동 연방관구를 관할하는 대통령 전권대표에게 연방정부 부총리 직을 겸직하게 했다. 이 모두는 극동개발을 향한 푸틴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다.

극동 개발의 전초기지는 ‘블라디보스토크’이고 플랫폼은 ‘동방경제포럼’(EEF)이다. EEF는 해외투자 유치와 아태지역 주변국과의 경제 협



력 활성화를 위해 푸틴이 대통령령으로 2015년에 창설한 연례 국제포럼이다.<sup>12)</sup> 제1차 포럼에서부터 신개념의 공세적 투자유치 정책을 제시해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일종의 경제특구로서 18개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일원을 포함한 5개의 항구를 ‘자유항’으로 지정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에게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각종 세제 등에서 지금까지와는 수준이 다른 파격적인 특혜 제공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중국 몽(夢)’이라면 푸틴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 몽(夢)’이다. 러시아의 신 동진정책은 지난 20세기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진출 전략과도 일맥상통한다. 동부 대서양 연안에서 출발했던 미국이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서부의 로스앤젤레스를 건설했고, 이를 통해 태평양의 파고를 넘어 동아시아를 향해 성공적인 세력 팽창을 이룩했다. 말하자면 미국이 서부 개척을 통해 대서양세력이

10) 신동방정책은 2012년 세 번째 집권을 시작한 푸틴 대통령이 21세기 국가발전 대전략차원에서 낙후된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조속한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천명한 일련의 정책을 일컫는다.  
 11)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Ф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Байкальского региона». Утверждена распоряж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от 29 марта 2013 г.  
 12) Восточ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учреждён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 2015 году в целях содействия ускоренному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расшир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52808> (검색일: 2018. 03. 10)

## 9-BRIDGE 전략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협력사업 추진



자 태평양세력이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통적인 유럽세력 러시아도 잠자고 있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부흥시켜 명실상부하게 아시아-태평양 세력으로서 공고한 ‘닷’을 내리고자 한다.

신동방정책의 추동력으로서 푸틴 정부의 극동개발은 크렘린의 지정학적 과제이며 러시아의 국가발전 동력을 역동적인 아시아-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협력에서 찾고자 하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극동개발과도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연해주로 대표되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관문’이다. 그래서 극동은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최우선적으로 교차하는 공간이다.

푸틴은 한국을 신동방정책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인식하고<sup>13)</sup> 자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에너지, 철도, 전력, 광물, 식량, 수산물, 새로 열리는 북극 등을 한국과의 경험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한다. 한편 한국의 입장

에서 남북한을 관통해 북방으로 이어지는 철도·가스관·전력망 연결, 해외식량기지 개척, 안정적 어획량 확보, 북극 개발 및 항로 개척 등은 모두 단순히 경제적 이익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미래 한국의 존립과 국가적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생명선’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9-Bridge 전략’을 우선적으로 채택한 이유다.<sup>14)</sup>

## 6.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거는 기대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한·러 양국정부가 21세기 자국의 경제적 번영과 국제정치적 위상 제고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이다.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보성, 양질의 노동력, 큰 규모의 주변지역 인구 및 시장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북단과 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남북러 삼각협력이 추진될 경우, 이것이 다양한 분야에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한·러 양국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다.

신동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이 상호보완성을 강화시켜주는, 그럼으로써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수렴되지 못하고 있다. 왜 일까?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요인, 특히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 북한의 핵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미·러관계 악화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13) “극동 개발은 유라시아로 열린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16년 9월 5일.

14)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EEP)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해 발언한 VIP 기조연설에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9개의 다리(9-Bridge)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협력을 이루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9-Bridge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분야를 의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bukbang.go.kr/business/9-bridge/>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닐 것이다. 한·러 양국정부의 소통노력 부족, 제도의 차이, 전략의 부재, 상호 불신과 오인 등에도 그 원인이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 사이의 정서적, 정책적 괴리를 줄이는 가운데 정교하게 현실적 접점을 찾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좁게는 한·러관계 발전을 방해하는, 넓게는 신북방정책의 추동력

을 약화시키는 환경적, 구조적 제약 요인을 분석 및 극복하는 정치(精緻)한 전략의 강구와 과단성 있는 실행이 요구된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신북방정책의 추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최초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역사적으로 북방은 항상 '동경'(憧憬)의 대상이었고 기회의 공간이었다.

---

# 대선 이후 러시아 : 문제점과 향후 발전 시나리오

---

안드레이 라보프

---

2018년 3월에 있을 러시아 대통령 선거는 러시아 현대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누가 이번 선거의 승리자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크렘린의 주인’은 그 자리에 도전장을 던진 공식 후보자 명단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아난 사실상 지난 18년간 국가를 통치해 온 블라디미르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이다. 모두 7명이 되는 나머지 후보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들의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으며, 몇몇은 자신을 후보로 내세운 소속 정당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슈메이커이자 유명 TV 프로그램 사회자 출신인 크세니야 소브착(Ксения Собчак)은 정치라는 새로운 활동무대에서 자신을 부각시키고자 했고, 자유민주당(Либераль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партия) 당수인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Владимир Жириновский)는 어찌면 3월 대선에 참가하는 이벤트로 자신의 정계 은퇴를 화려하게 장식할

지도 모른다.

크렘린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그룹들도 개인적,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선거 운동 과정과 전체 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면서, 이를 통해 선거 이후 바로 구성될 정부 내각과 연방 기관의 주요 직책에 대한 새 지분을 두고 푸틴 진영 내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했다. 물론, 이들 그룹은 결코 자신들이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선거 유세 과정에 미친 그들의 영향은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강력했다. 그들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푸틴에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어떤 후보는 밀어주고 어떤 후보는 견제해야 할지를 알려줌으로써, 대통령 앞에 자신들의 중요성과 창의적 능력을 입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선 후보들을 포함해 여러 정치 세력들이 이번 선거에 참가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배층 엘리



트 파벌의 개인적, 조직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서일 뿐이다. 이들의 그 어떤 활동도 향후 러시아의 발전 전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대선 이후 러시아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바로 대내적, 대외적 노선을 채택하는 일이다. 이 문제가 최근 첨예한 문제로 부상한 이유는 21세기 러시아가 10여 년 동안 견지해 온 기존의 발전 시나리오를 앞으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현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세계 에너지 구조의 급변과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화로 이미 석유 가스 수출은 더 이상 러시아에 안정적 경제 성장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2014년 이후 여러 사회 경제 분야에서 침체가 관측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 할 수 있는 실질 국민소득(GNI)이 이미 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크림 사태 및 미국과 일부 미 동맹국들이 채택한 ‘매그니츠키 법’이 야기한 미국 주도하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게다가 미 사법기관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명목으로 러시아 정부를 비난함에 따라 향후 워싱턴이 새로운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정부가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거의 주지 않았으며, 일부 산업 분야의 경우 제재의 대응조치로 오히려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아무리 줄기차게 주장한다 해도(2017년의 경우 러시아는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됐다) 사실상 현실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러시아는 선진 열강에 비해 기술적인 면에서 뒤쳐 있으며,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러시아가 항상 선도적 입지를 점하고

있던 우주 항공 같은 관련 산업 분야에서조차 격차가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경제 제재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 예산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러시아 기업과 은행들은 서방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한편, 21세기 들어 지난 10여 년 간 러시아에서는 변화에 대한 일련의 부정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모든 단계의 국가 행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러시아 관료 조직은 현재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만족한다. 이 시스템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정권과 가까운 영향력 있는 관료들이 이끄는 최대 국영 기업들이다. 이런 시스템 내에서 사기업은 국가 구조에 종속되며, 정부 관료들은 다양한 부패메커니즘과 부패 고리를 통해 사실상 기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사회 비특권 계층이 정부 관료조직에 수없이 많은 요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 역시 변화를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심각한 변화는 언제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믿음 속에 소련이 붕괴된 이후 1990년대 힘든 개혁의 시기를 겪고 오는 과정에서 러시아인들의 의식 속에 남게 된 심리적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늘날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태도가 팽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오!” (이 말은 무엇보다 국가가 사회를 그냥 놓아두라는 바람을 암시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희망을 대통령의 권력과 결부시키고

있다. 이런 현상은 푸틴 대통령이 매년 진행하는 생방송 프로그램인 ‘국민과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요청하거나 부당한 사안을 고발하는지 말이다. 그저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국민들의 문제가 즉시 해결될 수 있는 지 말이다! 현대 러시아에서는 사기업이나 유능한 전문가들이 정부나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이 전혀 없다. 그들에게는 정부 당국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당도, 영향력 있는 경제단체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일반 러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여론에 드러나는 사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기업가를 ‘민중 노동자의 원수’라고 선전했던 소련 시절 형성된 이미지가 아직까지 상당 부분 남아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필요성은 이해하면서도, 정작 그 변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권력과 돈, 특권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 사회에서는 두 가지 경제성장 정책 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산업재 수출을 급격히 늘리고 GDP 대비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투자 유입이 어렵기 때문에 소비를 크게 줄여서 투자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특별히 구성된 ‘발전

전략 개발 기관’을 통해 정부가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이 아이디어는 영향력 있는 조직인 ‘스톨리핀 클럽’(Столыпинский клу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이 클럽의 이름은 러시아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통치 중 1906-1911년 동안 러시아 정부를 이끌었던 개혁주의자 총리 니콜라이 스톨리핀(Николай Столыпин)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클럽 회원들 중에는 러시아 국회의원, 대기업 CEO 및 3월 러시아 대선에 출마한 보리스 티토프(Борис Титов)<sup>1)</sup> 기업인 권리 보호 담당 대통령 전권대표 등이 있다. ‘스톨리핀 클럽’은 외화 대출에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 계획위원회를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 비평가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비효율적인 소련 시절 계획경제를 이끌던 경험을 살짝만 수정한 다음 이를 ‘소생시키려’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비평가들은 또한 그러한 정책은 필연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비를 줄여서 성장을 촉진하려는 생각은 현대 도시 사회환경에서는 거의 성공할 수 없는 스탈린주의 산업화 모델을 연상시킨다.

경제정책 자유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이 진영의 리더는 경제개발 분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전략개발센터<sup>2)</sup>’ 이사회 의장인 알렉세이 쿠드린 전 재무장관이다. 여러 면에서 판단해볼 때, ‘경제 블록’에 속하는 일부 장관들과 러시아 정부의 현 구성원들은 경제 자유화라는 이데올로기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노선의 지지자들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정

1)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러시아 경제단체장 격인 보리스 티토프 기업인 권리 보호 담당 대통령 전권 옴부즈맨(러시아 내 사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직책)

2) 전략개발센터는 러시아 정부 산하의 비영리 재단법인 싱크탱크로 러시아의 경제 및 사회, 외교 등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한다.

부 지출, 무엇보다도 국가 기구 유지비용 및 국방비 지출을 현격히 줄여야 한다고 본다. 이들은 국유 기업의 대대적 민영화, 경제의 민주화를 옹호한다. '경제 자유주의자'들은 경쟁을 통한 발전, 중소기업 지원, 국가에 의한 과도한 관료주의적 관리·감독으로부터의 기업 해방 등을 위한 법적·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제안하는 개혁안이 실현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의회가 사회의 다양한 사회·정치 집단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기구로 변모하고, 의회가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치 지도부도, 정권과 가까운 영향력 있는 그룹도 모두 이러한 개혁에는 관심이 없다. 바로 이 점이 '경제 자유주의자'들이 안고 있는 명백한 약점인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 이후 자신의 정책은 서로 경합중인 두 가지 노선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가 원수에 의해 공식화된 이 접근법은 푸틴에게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다만, 문제는 둘 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할 경우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러시아 사회에 형성돼 있는 만장일치의 합의를 깨야 하는 필연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데 있다. 왜냐하면 다수의 계층이나 막강한 세력을 가진 계층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계층들이 행동에 나선다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크렘린에 제안된 발전 전략 중 하나를

실현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정권 최고위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지만, 그 어떤 유형의 위험도 피하고자 하는 크렘린은 그런 의지를 과거에도 보이지 않았고 현재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분명히 기존의 발전 시나리오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예전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고위 정부관료들은 은퇴 연령을 높이고, 세금을 인상하며, 국민 교육과 국가 보건에 부분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등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선거 이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점점 자주 언급하기 시작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13%) 개인 소득세를 인상하고 누진세(현재 러시아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사회가 현상 유지되도록 기여하겠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 대중의 복지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긴장, 나아가 정치적 긴장이 증대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악화된다면, 크렘린은 앞서 언급한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배제할 수 없다. 아마도 선택한 전략은 '국가주의'<sup>3)</sup> 전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략은 국가 예산과 기본적인 재정 분배에 영향력 있는 정권 최고위층 그룹

3) 국가(정부)를 가장 우선적인 조직체로 규정하고 국가 권력에 사회생활의 전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통제력을 부여하는 사상

의 입지를 위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전략은 정권 실세그룹 중에서도 특히 막강한 세력인 군과 정보기관의 입지를 강화한다. 이 정책은 국제무대에서 반(半)고립주의적 노선을 견지하는 일종의 동원 사회(society of mobilization)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러시아 경제의 독점화와 국가주의화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비특권층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해 엘리트 그룹의 책임감이 급격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주의 정책으로 국민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반대로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악화될 경우, 러시아 사회의 비특권층과 권력층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경제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은 서구 주요 선진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정부가 러시아 채권 거래를 금지하는 등 제재를 확대할 경우, 러시아 금융 시스템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이처럼 현대 러시아는 대외정책과 국내정책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렘린은 한편으로는 강경한 대응 자세와 대치 상황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과시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과 대화하면서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 양면정책은 일단 힘든 세월을

견뎌내야 하며, 추후 국제정세가 변해 다시금 기회가 찾아온다면 서방 또는 그 일원인 유럽 연합의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계산을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새로운 제재 조치를 가한다 하더라도, 국제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동부와 시리아에서의 분쟁과 관련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에 한 치도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며, 유럽 연합의 여러 국가에서 일고 있는 대중운동에 대한 지원 역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전에 천명한 바 있던 ‘동방정책’의 틀 속에서 중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는 베이징에서 그에 상응하는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분명 러시아를 수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인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변수인 ‘미지수’를 복잡한 대외정치적 계산에 포함시키는 일은 피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지 못한 기대를 일본, 한국, 아세안 국가와 같은 다른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진전을 통해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뭔가 비중 있는 주도권을 쥐기 위한 동력이 충분하지 않다.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해 러시아는 변함없이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접근할 것이다.

번역: 서유경, 한국외국어대 강사  
youkyseo@naver.com

· 안드레이 라보프(A. V. Ryabov) 역사학 박사, IMEMO 세계경제-국제관계 학술지 편집장  
· 원제: РОССИЯ ПОСЛ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ВЫБОРОВ: ПРОБЛЕМЫ И ВОЗМОЖНЫЕ СЦЕНАРИИ РАЗВИТИЯ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2.26)

# 인도와 아세안 : 새로운 협력 단계

나탈리아 로고주나

2018년 1월 25일 델리 시에서 인도와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외교관계 25주년을 기념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의전 행사인가 아니면 상호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인가?

최근 경제적·지정학적 이해관계로 드러났듯이 화해에 대한 상호 관심이 증가한 사실을 고려하면 후자가 타당하다. 오늘날 인도가 아세안 국가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인도의 국경일인 ‘공화국의 날’(1월 26일) 축하 퍼레이드에 아세안 국가정상들을 초청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알 수 있다. 많은 고위급 정상들이 이 성대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인도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경우였기에, 이 사실은 오늘날 높아지고 있는 인도의 국제적 명성을 전세계에 입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공동의 가치, 공동의 운명’이라는 기념행사의 명칭도 상징적이다. 이것은 인도와 아세안 간 상호 관계가 여러 문제들에 대해 그들의 입

장을 이해하는 근거가 되는 문화 교류라는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인도의 관심은 다면적 특징을 갖는다. 개회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나는 우리 이웃이자 친구로서의 아세안 국가들이 새로운 인도의 변화 과정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고 천명했다. 인도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새로운 시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이다. 맥킨지사의 평가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때 그 경제적 잠재력은 세계 7위이고, 2050년까지는 4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시장의 필요성은 아세안 국가들도 함께 느끼고 있다. 인도는 그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2025년까지 인도의 소비 시장은 양적인 면에서 세계 5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디 인도 총리가 회의 참가자들에게 선언한 것

처럼 새로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인도는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원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인도의 에너지 부족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 인도는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구입하고 있고 베트남과 유전 탐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제적 상호 협력을 위한 기반은 이미 만들어졌다. 아세안과 인도 간 자유무역지대 협약이 2015년부터 효력을 발하면서, 양측 간 교역량은 1992년과 비교하여 25배 증가했고, 수치상으로 2016-2017년에는 7백억 달러에 달했다. 하나의 단위로서 아세안 국가들은 교역량 면에서 인도의 네 번째 파트너이고 그 비중은 인도 대외무역량의 10.2%에 해당한다. 반면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그 교역량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적어서 2.6% 정도이다(심지어 타이완과 홍콩보다도 떨어진다). 하지만 최근 상호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인도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직접 투자금액은 5,147억 3천만 달러로 평가되고(2000년부터 이뤄진 인도에 대한 전체 외국 투자금액의 12.5%), 반면 아세안 국가 경제에 대한 인도의 투자는 전체 외국 투자의 20%에 해당한다.

회의에서 모리 인도 총리는 아세안 정상들에게 2016-2020년간 아세안과 인도의 상호 협력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협력의 확대라고 호소했다. 인도가 지역 내에서 경제적 지위를 중국에 상당 부분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교역량 면에서 6배, 그리고 투자액 면에서 10배). 중국의 영

향력 강화와 함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입증되고, 따라서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을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리더로 인정할 가능성 역시 증명되고 있다.

무엇을 통해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양측을 연결하는 운송 인프라 구조 구축이다(인도는 이를 위해 10억 달러를 할애하기로 약속했다). 오늘날 이 과제의 해결에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모든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인도-미얀마-태국을 잇는 3차간 자동차 도로 건설이 2019년에 완공될 것이다. 그리고 차후 그 도로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까지 연장될 것이다. 인도는 이곳에 건설될 산업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7,800만 달러 규모의 특별 발전기금을 만들었다. 인도 동북부와 미얀마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뉴델리와 하노이 간 철도시설 건설, 메콩-인도 경제회랑 설립과 같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해운과 항공 분야에 대한 동남아 국가들과 인도 간 소통 채널 구축 가능성도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대한 관련국들의 관심을 확인하는 사례로 기념식에서는 아세안과 인도 간 항공운송협약이 체결됐다. 이것은 “지역 내 사람들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관광과 비즈니스, 투자가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비록 이 프로젝트가 규모 면에서 동남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신실크로드’ 계획보다 뒤쳐진다 하더라도, 인도에게 실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 의미도 가져다준다. 즉, 인도는 경쟁국인 중국에게 지역 내에서 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도와 아세안 국가 간 상호관계가 경제에 국한되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회담 종료 후 체결한 델리 선언으로 판단해 보면, 지역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제들도 관련국들이 관심을 갖는 긴급 사안이다.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강한 세계 지역에서 자국의 위치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여러 가지 정황 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리더가 되려는 인도의 야망은 아세안 국가들에 의해 쉽게 수용되고 있다. 이 문제에서 관련국들의 입장이 일치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힘에 대한 동일한 우려이다. 그리고 비록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정치에서 분명한 중국 편향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커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은 아세안 국가들에게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역 내에서 다른 거점을 찾으려는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동의장인 싱가포르 리선룽 총리가 기념식에서 밝힌 대로 “우리는 개방적이고 균형 잡힌, 그리고 절대적으로 구별되는 지역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인도가 지역 발전에 본질적으로 공헌하길 바라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관련국들은 남중국해 문제를 경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은 경제적,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인도는 항해의 자유뿐만 아니라 분쟁 중인 파라셀 군도의 베트남 유전 이용에 관심이 있다(석유 탐사는 인도 석유공사에 위임돼 있다). 인도 무역량의 40%가 남중국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인도는 영토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 중국과 공개적으로 분쟁에 휩싸일까 우려하

고 있다. 인도는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자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더 치밀하게 활동하려 할 뿐, 중국과의 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델리 선언에 언급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서 인도의 외교력이 드러난다. 이것은 또한 아세안 국가들도 회피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회담 참가국들은 평화, 안정, 해상 안전, 항해의 자유와 지역 내 항공 교통의 자유를 유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법 규범에 따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취해야 할 행동 강령을 빨리 체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피력했다. 문서의 다음 항에서 이미 관련국들은 공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상 협력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많은 지역 언론들은 문서에 포함된 이 조항을 지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했다.

2012년부터 인도와 아세안은 전략적 파트너가 됐다. 인도와 아세안은 가까워지고 있고 국가안전에 위협이 되는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도 입장이 동일하다. 이 문제에 대한 공조도 예정돼 있고, 그 중에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포괄적인 대응 협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협상도 포함돼 있다.

논의된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번 회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세안과 인도 간 관계가 깊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모디 인도 총리가 초지일관 행하고 있는 ‘동진(Act East)’ 정책의 틀 안에서 규정된다. 인도의 입장에서는 아세안이라는 경제 공간에서 가장 강력한 외부자인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지역 내 경쟁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공식적으로 중국이 인도와 아세안국가들의 관계 발전에 만족감을 표했다 하더라도, 이 주제에 대한 중국 언론의 어조는 달랐다. 언론 보도에서는 인도가 지정학적으로 역내에서 자국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허세부리고 있는 꽃내기’로 표현됐다.

아세안 국가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지역 리더 간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이것은 결국 그들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다.

번역: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lsy@hanmail.net

· 나탈리아 로고쥐나(N. G. Rogozhina) 정치학 박사, IMEMO 수석연구원  
· 원제: Индия и АСЕАН - новый этап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7.12.18)



---

#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결산

---

올레그 다비도프

---

한국 대통령의 중요하고도 어쩌면 유일한 중국 방문의 목적은 지난 해 미국과 한국이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결정한 이후 훼손된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에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사드 배치가 매우 '국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전적으로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을 견제할 목적이라고 설명한 한국 정부는 중국의 격한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의 입장은 극도로 예민했을 뿐만 아니라, 미사일 방어(MD) 체계 구축은 이웃 국가에 심각하게 위협적이고 분명하게 비우호적 행보라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 남한과 정치적 대화 및 문화, 관광, 기타 관계의 대폭 축소라는 중국의 실제적인 움직임이 뒤따랐다.

한국인들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 측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고,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인에게 가법

계 '선물'을 준 것으로 자신들을 기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해당 장비를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에 그것을 돌이키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다(워싱턴에서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해당 장비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한국에 배치되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가 매우 불가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결코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할 목적이 아니라고 중국 지도부를 설득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중국 방문 전날 중국 CCTV 방송국과 인터뷰를 비롯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합의에 따라 MD 체계를 구성하는 레이더와 다른 장비가 중국 내 군사시설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베이징은 그 약속의 의미를 알면서도, 심지어 의도적으로 '순진한' 발언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방문 전날까지도 중국인들은 MD 체계가 중국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더욱더 무게 있고, 정치·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보장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당연히 이 문제는 남한 측이 미국과 합의 없이 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냉담함과 형식적 만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관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국가정상의 방문을 여러 방법으로 그럴듯하게 ‘장식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행보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정상의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이 ‘잘 알려진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공동 성명문을 발표하거나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거행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사실은 분명 의미심장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회담 중에는 예상대로 북한 관련 주제가 주를 이뤘다. 평양을 ‘설득하거나’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베이징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극적인 행보는 중국 정상에 의해 무시됐다.

동시에 양측 입장이 대부분 일치한 사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러한 면에서 양측은 네 가지 관련 원칙을 작성해 제안했다. 그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즉, 북한뿐만 아니라)의 비핵화 고수,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남한과 북한 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다.

이러한 ‘원칙’의 기저에 있는 전반적인 정치적 맥락이 이전에 합의된 미국과 한국의 입장보다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강제적인 접근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중국인들의 그간의 노력을 인정할 만하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변함없이 고수했던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법을 보다 더 진전시키기 위해 중국과 양자 관계를 ‘재개’하려는 한국의 시도를 중국은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동시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하려고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요구들은 기본적으로 무시됐다. 회담에서 분명한 답변도 얻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제안한’ 다양한 형태의 3자 회담(한국-중국-미국, 한국-중국-일본)의 적법성 역시 그러했다. 시진핑은 양국 간 새로운 ‘핫라인’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해 한국과 접촉할 가능성만 열어놓았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과 대중 연설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매우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인프라 구조 구축 프로젝트 분야뿐만 아니라 중국이 발의한 정치적 목적과 과제에 있어서도 양국 간 공동 이익에 대해 언급했던 것이다. 한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거대 프로젝트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를 고려해, 한국 정상이 언급하는 대외정치적 ‘자주성’ 발언이 워싱턴에는 오히려 불쾌한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엇갈린 관계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협력 체계' 구상을 통해 개인적으로 밝힌 주장을 한국이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여기서 다시, 반중국적 성향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는 미국의 입장에 남한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방문 기간 '중국 카드'에 대해 진지하게 정치적으로 최후 수단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잭팟'을 터트릴 수 없었다. 유일하게 가시적인 업적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은 비록 불안정하지만 사드 문제를 한국과 중국의 상호관계와 분리해 개별적으로 다루자는데 합의한 점이다. 그러나 아마도 중국인들은 한국에 구축된 미국의 MD 체계가 이미 현실화됐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를 유지하며' 현 상황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듯하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첫 행보는 이미 이뤄졌다. 한국 문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의 회담에서 한국 측은 양국의 경제협력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식 대화채널을 복원하자고 제기했다.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산품뿐만 아니라

금융 및 투자 부문과 서비스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의 틀을 좀 더 넓힐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점을 염두에 둔다면 베이징과 서울 간 정치적 불협화음이 장기적 측면에서 양측 관계를 규정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오래 전부터 서로를 필요로 하는 뿔 수 없는 파트너이다. 여러 가지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올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에만 양국의 교역량은 2,022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협력을 조율하는 측면에서 실제로는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역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관계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더욱 더 노련한 게임을 해야 한다. 두 나라와 우호관계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적대적인 두 거인들과 상호 관계 속에서 한국의 이익을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번역: 이성민, 한국외국어대 강사

lsmsly@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К итогам поездки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е Ина в КНР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7.12.18)

# 중국 : 당 대회, 그 후

바실리 미헤예프, 세르게이 루코닌

중국 공산당 19차 당 대회 이후 2017년 말 중국 정세는 예견된 대로 안정적이다. 중국 공산당원들은 관례대로 당 대회 자료를 학습한다. 당 지도부는 국제사회에 당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공산당 관료들의 해외여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당 대회 이후 중국 최고 지도부의 주요 관심 순위는 경제와 대외정치가 됐다. 먼저, 경제 분야에서 2017년 하반기에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고 있다. 9개월 동안 GDP 증가율은 6.9%에 달하고, 1년 기준으로 보면 6.8% 수준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평가절하와 자본 유출로 인해 중국 경제의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2017년 실적은 악화되지 않았다. 위안화는 US 달러 대비 5% 이상 절상됐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활기가 넘쳐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 증가 추세가 회복돼 연말에는 3조 1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거시경제 서프라이즈'의 주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시진핑 주석의 주도로 지속적인 '공급 장려' 정책 시행
- 석탄 및 철강 산업의 과잉생산 해소 및 이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 건설업 규제 완화
- '그림자 금융시장' 극복을 통한 재정 안정성 확보 조치
- 혁신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자연 환경 보호와 '녹색' 경제에 대한 투자 증가

이렇듯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에서 12월에 시진핑 주석 주재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 중국 경제발전 모델의 교체, 즉 '고속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3년에 걸쳐 세 가지 주요 발전 목표가 제시될 것이다.

- 금융시장 개방정책에 따른 금융 위기 예방
- 인구의 사회적 계층화에 따른 빈곤 탈피
-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

상술한 목표들은 이른바 ‘시진핑 경제사상’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채택된 대외경제 분야의 결정사항은 향후 중국 경제가 세계경제로 통합될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향후 15년간 24조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고, 2조 달러 규모의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기업에 투자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자국 경제정책의 전환을 설명하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질적 지표로의 경제 개편의 어려움, 특히 GDP의 260%에 달하는 중국의 대내부채 문제를 지적한다. 실질적으로 경제발전 전략의 교체가 확실한 만큼 2018년에는 많은 사안들이 중국 지도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018년 3월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경제부처를 포함해 대규모 인적 개편이 단행될 것이다.

19차 당 대회 이후 몇 달 동안 대외정책에서 중국 외교가 한층 더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묘한 간극도 감지되고 있다. 즉 ‘공동운명을 갖는 세계,’ ‘독자적 변영에 반하는) 공동 변영,’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과 같이 명분 좋은 슬로건들과 현실 정치에서 항상 믿을 수만 없는 베이징의 행보 사이에 나타나는 불균형이다.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동유럽, 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보여준 중국 이니셔티브인데,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재정적으로 이들 지역을 뒷받침하고 있다. 11월말 헝가리 부

다페스트에서 열린 중동부유럽 16개국과 중국 간 정기협의체 ‘16+1’ 포럼에서 중국은 ‘중국·동유럽’ 인터뱅크 협회에 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12월에 중국과 그레나다는 그레나다 경제개발계획에 중국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전략적으로 민감한 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은 당 대회 이후 노골적으로 ‘일대일로’ 전략 프레임 안에서 정치·군사적 과제와 연계해 투자 외교를 활용하고 있다. 12월에 중국은 몰디브와 자유무역지대 창설, 상호 교역 증대, 군도 개발에 대한 중국의 신규 투자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중국 해군의 몰디브 입항에 합의했다. 12월말에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프로젝트에 57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중국,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새로운 3국 안보대화를 가동한다.

중국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 중재를 제안하고, 동시에 랑군에서 중국-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7년 말 남중국해에서 중국은 자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일방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 베트남, 필리핀과의 경제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및 지역적 경제협력, 안보 문제에서는 중국 이니셔티브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당 대회의 결의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해 중국은 다음의 두 가지 사상을 고수한다.

- 치열한 경쟁 속 다자간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적 발전 노선

• 경제 개발과 아태지역 번영의 '중국 프로젝트'

그러나 “글로벌 발전과 공동 운명체 건설로 나간다”는 사상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실제 정책에는 다른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콘텐츠보다 중국의 리더십을 주장하는 메시아적 맥락이 더 많아 보인다. 게다가 과도한 어조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오히려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의 압박에 놀랄 수 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베이징의 노력도 별다른 진척이 없고, 구체적 대안이 없다. 특히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상황에서 중국은 어느 주도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행보에 대해 중국의 입장은 중립적이면서도 부정적이다.

당 대회 이후 일본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정책은 복합적인 결과를 수반한다. 일본과 관계에서는 중·일 정상회담 추진, 중국과 일본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국가들을 위한 자유무역 지대 추진 등의 긍정적인 계획들이 많다. 그러나 현재 이 구상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계획에 불과하다.

한국과 관계에서는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양국의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한국은 '3불(三不) 정책,' 즉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요구를 당장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미 관계와 대북 관계는 가장 실패

한 경우이다.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미·중 관계의 정해진 수순을 밟는 듯했다. 그러나 이후 워싱턴의 후속 행보는 중국에게 또 다른 도전으로 다가왔다. 중국에 대한 도전은 다음과 같다.

- 지적재산권 보호와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 중국을 압박
- 사이버공간 보안과 중국이 제조하는 신무기에 대한 우려, 중국이 제3세계 국가들(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등)에서 미국과 경쟁을 가중시킨다는 우려
- 인도-태평양 지역(전통적인 아태지역 대신)의 새로운 미국 독트린 선언: 그 핵심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가 '민주주의적 세력'(미국과 일본)에 동참하는 것
-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가 없다는 미국의 입장
-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러시아와 동일하게 중국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주요 위협임을 명시

중국은 미국의 주장에 대해 '상호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을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협조적인 해법으로 화답하려고 애쓰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과 파트너십 관계에서 이탈하려 하지 않는다(가장 강하고 영향력 있는 세계적 강대국과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적 상호관계에 있으려 한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압력 속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 중국의 세계적 리더십 추구 전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중국은 추가적인 양보를 미국

에게 해야만 할 것 같다.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베이징은 난관에 봉착했다. 중국은 평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단도, 압력을 행사할 현실적 지렛대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방안도 없다. 북한은 핵 프로그램(인도의 경우처럼 형식상으로는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과정과 그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을 할 뜻이 없다.

이처럼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중국은 2017년 말 북한에 대해 정치·군사적 압박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연말에 중국 동북 지역 관영언론은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처해야 할 행동요령을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12월에 중국이 군사훈련을 실시했는데, 한국 군부에 따르면 이 훈련의 목적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의 핵시설을 점령하기 위한 것이다. 퇴역한 중국 장성들이 언론에 나와서 더욱 자주 그리고 노골적으로 “오늘날 핵전쟁의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한다.

높아지는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한국, 러시아와 북핵문제를 협의해 그 대안을 찾도록 등을 떠밀릴 것이다. 그러나 관련국가와 어떻게 상호 협력하고 그 형태와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 2017년 말에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對북한 군사정보 교환 조치는 평양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

적으로 협력한 작은 첫 걸음에 불과하다.

당 대회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는 큰 변화가 없다. 미묘한 차이는 북한의 위협과 이 위협을 배경으로 이뤄지고 있는 미·일, 한·미 간 정치·군사적 밀월관계와 관련 있다. 중국은 한·미·일 밀월관계에 자국의 군사훈련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7년 12월에 실시된 러·중 합동 미사일 방어훈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병행해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에 대한 중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19차 당 대회 이전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예를 들어 에너지자원, 실크로드 경유지, 인도차이나와 동유럽에 상응하는 중국의 상품시장, 군사 협력 등에서). 그러나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행보는 러·중 관계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요소로 중국이 생각한다기보다는 미국, 일본, 한국과의 경쟁 및 협력 관계에서 중국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활용하는 ‘카드’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인식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존재해왔다. 19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한층 더 ‘카드’ 쪽으로 옮겨질 개연성이 높다.

번역 :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바실리 미헤예프(V. V. Mikhe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정회원, IMEMO 부원장  
·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경제학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부장  
· 원제: Китай: жизнь после съезда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7.12.26)

# 2017년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세르게이 루코닌,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

본고에서는 2017년 중국의 대내외 정치 및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 결과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인사 결과와 시진핑 주석의 권력 강화 및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이념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대해 살펴본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반면 그 구체적 실행 수단은 아직까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경제정책의 불완전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대외정치와 안보에 주요한 위협 요인과 미·중 관계 및 러·중 관계, 북한의 핵문제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일대일로 전략 하의 중국·인도 관계와 최근에 있었던 브릭스 정상회의 결과를 고찰한다.

## 정치

2017년 중국에서 가장 굵직한 정치적 사건은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19차 전인대)였다. 19차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을 당의 핵심으로 세우기 위한 선전과 반부패 운동이라는 명목 하에 정적을 제거하는 등 강경정책을 펼쳐 시진핑 주석 체제의 안정을 꾀하는데 집중했다. 그 결과 시진핑 주석의 1인 통치체제가 만들어졌고 친(親)시진핑으로 흘러간 관료주의적 권력투쟁 과정에서 반(反)시진핑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19차 전인대 개막 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는 중국 당헌 개정 여부가 전인대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의 이름을 당헌에 올려 그에게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동등한 역사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시진핑 주석의 ‘통치이념’인 중국 특색 사회주의만을 적시할 것인가도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제였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전인대 연설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 14개 원칙을 발표했다. 이



중 당 지도부는 ‘인민 중심’ 및 ‘인민 주인’ 표방, 전면적 개혁·개방정책 지속, 혁신·친환경·개방·보편적 발전 실행, 의법치국(依法治國), 사회주의 주요 가치 준수, 인민 복지 향상, 친환경 발전 및 친환경 생활모델 설립, 국가안보 구상 실현, 군에 대한 당의 지도 강화, 1국 2체제 원칙, 공동체 통일, 인류 공동운명체 의식, 당 운영 개선 원칙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표명했다.

19차 전인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의 물갈이 인사가 이뤄졌다. 개편된 상무위원회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으로 점쳐지는 중앙 관공청 주임 리잔수(栗戰書), 당 중앙조직부장 자오러지(趙樂際), 왕치산(王岐山)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후임,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왕후닝(王滬寧), 국무원 부총리 왕양(汪洋), 상하이 시 당위원회 서기 한정(韓正)을 포함한 6세대(60년대생) 정치인이 대거 입성했다.

이번 전인대에서도 왕치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다. 왕치산은 반부패 특별결의안을 통해 중앙위원회 권위 보호, 중앙통치 강화, 당 내부 운영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정치학계에서는 이것이 향후 중국의 미래에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위해를 가할 것인가, 또한 전인대 전후로 시진핑 주석의 1인 권력체제 형성과정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날카로운 토론이 이어졌다.

몇몇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정치가 마오쩌둥과 유사한 또 다른 부정적 ‘개인숭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19차 전인대에서 반대파의 저항을 완벽히 제압해야만 할까분한 마

음으로 시장개혁과 개방정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민주적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진핑 주석의 독재 강화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은 19차 전인대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취한 사회·경제분야 리스크 최소화 조치를 주목한다. 중국은 언론, 인터넷 사이트, 특히 인사 관련 논의가 활발한 공간을 대상으로 이데올로기 통제를 강화했고, 경제적으로는 암호화폐시장(약 2천 5백억 달러 규모)을 사실상 폐쇄했다. 금융당국은 중국 암호화폐시장 거래 중 90%가 투기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암호화폐시장은 중국 금융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 중 하나라고 진단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지난 9월말부터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향후 금융자유화 조치의 의미에 대해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유가증권·보험 분야, 외국인 투자 개방, 합작회사의 외국인 자본비율 100%까지 허용, 전기차 생산 확대(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내부연소엔진 생산을 전면적으로 중단할 계획이다) 등이 있다.

전인대 이후 시진핑 주석은 시장개혁 및 개방·개혁 가속화를 위해 1인 통치체제를 이용할 확률이 높다. 만일 중국이 글로벌 리더를 목표로 세운 전략 ‘일대일로’에도 일방적인 방식을 적용한다면, 세계 강국들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해 ‘일대일로’ 전략은 물론 향후 세계 경제와의 협력을 토대로 시장경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계획도 모두 불가능해 질 것이다.

## 경제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안정적이다. 주요

사회·경제적 불균형 요인이 동결됐고, 사회·경제적 상황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불균형에 대한 해법도 전당대회 이후로 연기됐다. 중국 및 해외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가 미래 경제성장을 위한 최종 전술을 마련하지 못한 듯하다. 어디로 가야할지는 알고 있으나(자유화, 친환경 경제, 혁신, 현대화, 확장 등),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중국 및 해외 전문가의 의견에 추가해 중국 공직자들의 논평을 종합해보아도 중국경제 정책의 총체성이 명확하지 않다.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구조가 급속하게 복잡해지자 경제 개별 분야들을 '수동'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이 같은 방식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은 첫째, 시장 프로세스 발전, 둘째, 특정 분야의 성장으로 타 분야의 리스크가 상쇄돼 제한적이거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위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다. 특히 전당대회 이후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잘 처리할 지는 분명치 않다.

2017년 2/4분기 중국의 GDP 성장속도는 6.9%였다. GDP 성장속도가 8개월 연속 예상 수치를 웃돌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연 GDP 증가율은 2016년의 목표치인 6-6.5%를 뛰어넘는다.

2017년 8월 중국 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6%를 기록했다(전월 대비 수치 비교 제시). 그 중국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7.8%, 합작회사가 5.8%,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포함한 외국 자본 참여회사가 7.9%에 이른다. 특히 주목되는 수치는 외국자본 참여회사의 성장률로서,

이 지표는 중국경제가 다소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다. 국영기업의 부가가치 지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시행하거나 신용 상승 등을 통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나, 향후 급격한 경제 '냉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광업 분야에서 부가가치 규모가 3.4%로 축소된 것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편 이것은 중국정부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광산(실제 초과 생산을 축소하고 있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가가치가 가공산업이나 서비스 쪽으로 재분배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계획한 경제모델 교체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8월 중국 기업들의 총 소득은 약 6,500억 달러로 21.2% 증가했다. 2017년 1-2월 서비스 생산지수(서비스분야의 발전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는 8.2% 상승했다. 정보 전송,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기술의 생산 및 적용,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에서도 성장이 관측된다, 서비스분야 기업들의 8월 총 이익은 13.4% 증가했다.

<표 1> 중국의 주요 사회경제 지표(2017년 1-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GDP	+6,9%	+6,9%	+6,8%
수출	+14,8%	+15%	+12,4%
수입	+31,3%	+25,7%	+22,3%
소비품 소매(小賣)	+10%	+11%	+10,4%

출처 : 중국 국가통계위원회(<http://www.stats.gov.cn/>)

2017년 8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7.8%로, 이 중 60.7%는 민간 기업에 의한 성과였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19.9% 증가했다. 인프라 투자 규모는 19.8%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국영 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정부의 기여가 적지 않다. 중기적으로 볼 때 인프라 투자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 인프라와 타 국가의 인프라가 결합돼야 할 것이다(일대일로 전략 프로젝트).

2017년 8월 부동산 분야는 전통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매매가 이루어진 주택지의 총 면적은 10.3% 늘어났고, 상업지는 12.7% 증가했다. 임대를 목적으로 매입된 토지는 전년 동기 대비 1억 4,230만㎡ 증가했다. 매물로 나온 상업지는 전년 동기대비 약 1,100만㎡ 줄어들었다.

소비시장(판매 총액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했다. 스포츠 및 레저 용품(+14.9%), 통신장비(+12.2%) 판매 증가 속도는 중산층 확대에 의해 소비 구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온라인 판매도 34.3% 늘어나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2017년 8월 중국의 대외무역은 10.1% 증가했고 이 중 수출이 6.9%, 수입이 14%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수치이다. 친환경(녹색) 경제를 위해 중국은 2017년 석탄생산량 1억 2,800만 톤을 축소했다(이미 8월 1년 축소 목표량의 85% 초과했다). 환경, 공공사업, 수자원 보호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계 자료들은 얼핏 매우 양호해 보여 심지어 중국 및 외국의 언론들 중에는 중국 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통계자료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

면 중국 경제가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총이윤의 대부분은 광업, 금속, 석탄·석유 가공 회사들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며,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대형 국영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즉 민간 기업, 특히 경공업 분야의 민간기업의 소득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천연자원, 노동력, 부수 원료들의 가격 증가로 인해 소득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중국 납품업체와 일하는 러시아 기업 측의 정보에 의하면 실제 구리, 카톤(포장에 사용된다), 기타 자재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 생산기업은 약 분기당 1회 꼴로 원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대형 국영기업들의 소득 증가도 기업의 효율성 제고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과잉생산 분야의 회사 수를 축소한 덕분이다.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고 제품 가격이 인상돼 통계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인 중 하나인 투자 매력은 감소되고 있다. 중국이 중국기업에 대한 신용정책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 채무를 줄이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결국 R&D 분야 투자가 줄어들 것이고 따라서 경제현대화 전략이나 혁신 리더로 변모하고자 하는 중국의 계획이 모두 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

중국 경제발전의 또 다른 동력(세계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 수요 회복)은 그다지 크지 않다. 중국 경제발전의 다음 주기는 향후 경제자유화(무엇보다 금융 분야)와 관련된다. 그러나 현 정치, 사법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새로운 주기의

성공은 불투명하다.

## 외교 및 국방 정책

협력과 경쟁의 파동이 이어지는 미·중 관계에는 기존에 이견이 뚜렷한 문제, 즉 중국이 미·지근한 협력을 보이고 있는 북핵문제를 비롯해 ‘무역전쟁’이라는 위협적 표현까지 동원해 미국의 불만을 드러낸 중국의 미흡한 시장개방 문제 및 ‘환율조작’ 등은 여전히 긴장상태로 남아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으며, 9월에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해상 훈련을 실시해 북한과 미국에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의 첨단기업을 사들이는 것을 미국이 원천 봉쇄한 것과 관련해 미 정부의 조치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이번 전인대는 갈등의 심화가 아닌 타협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대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그러나 ‘제재의 정치는 퇴장했다’는 러시아의 입장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 9월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대화에서 양측이 공동으로 북한의 핵문제에 대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중국은 기존의 대화 채널(법, 사이버안보, 대외 경제·정치·안보)에 추가해 미·중 간 사회·인도적 대화의 첫 라운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 중에서도 19차 전인대 이후 중·미간 ‘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중

국 매체들도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중 관계에 존재하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 강조했다. 첫 번째는 미·러 협력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양측 모두 관계 악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관계 상승의 시기’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2017년 6월 인도가 동맹국인 부탄과 중국이 대립 중인 영토에 자국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중국은 이미 이곳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9월경 양측의 갈등이 일부 조정돼 군사적 대립 상황에서 외교적 마찰로 그 정도가 완화됐으나, 이로 인해 중국이 일대일로 전략을 시행 중인 부탄과의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을 거쳐 미얀마에 이르는 남아시아 군사 정치 기후에도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했다.

더욱이 2017년 6월 인도가 파키스탄과 함께 상하이협력기구(SCO)에 가입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가입으로 상하이협력기구가 확대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인도의 가입 목적이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고 ‘일대일로’라는 전략의 접근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파키스탄의 가입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내 현대적 민간·군사 인프라 건설 등 중국-파키스탄의 협력사업을 통해 인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의 가입으로 인해 만에 하나 중국과 인도가 국지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경우 상하이협력기구 회원국인 러시아로부터 직접

적인 군사 지원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같은 '삼각구도'로 인해 중국은 지역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와 인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하게 처신해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추진되는 일대일로 전략의 안전보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은 최근 몇 차례 벌어진 북한의 핵실험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계속해서 강력한 실험이 이어진다면 핵 실험장 주변의 인프라가 붕괴되는 경우에 중국의 동북부 지역이 방사선에 오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을 취하는 경우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정치적인 도주의적 혼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에서 이탈한 대규모 난민이 중국으로 몰려드는 한편, 북한은 통제 불가능의 불법지대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상황을 탈출하려면 아직까지도 불명확한 군사·정치적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필요할 뿐 아니라 거대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관계가 동북아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양국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야에서 한계선을 넘어 악화될 수 있다. 자연히 중국 경제, 그리고 중국의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넷째, 중국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세계적 리더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히 핵확산 같은 극도로 민감한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무능함을 보인다면 중국의 세계적 야

심은 모두에게 의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를 충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중국을 더욱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 접경국가들의 방사선 오염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도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에 무게를 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9월 중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은 중국이 이 회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즉 브릭스 각각의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그 이익은 중국의 이익과 전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브릭스를 서구의 글로벌 통치기구에 맞설 수 있는 대안으로 내세우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중국은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대립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브릭스로부터 금융원조를 받고자 브릭스 회원국이라는 지위를 자국의 '정치적 정체성'(남아공과 중국은 함께 브릭스 회원이다)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 브라질은 브릭스 회원이라는 사실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타 국제기구로부터 브라질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인도에게 브릭스는 중국의 글로벌 활동을 관찰하기 좋은 대상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중국에 대한 브릭스의 가장 큰 의미는 '일대일로' 전략을 글로벌 무대로 진출시켜 '일대일로'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브릭스 내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800억 달러를 할당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위험 요인은 중국이

이처럼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브릭스는 ‘일대일로’ 전략 실현을 위한 수단이 아닌 중국 경제의 재정 부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 결론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특별히 가까운 관계, 즉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추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치선전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동시에 대외적 도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북방정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보여줘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많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중국에게는 새로운 군사적·정치적 위협과 도전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북한, 인도, 브

릭스 문제 뿐 아니라 영토분쟁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가 베트남과의 관계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아세안에서의 경제적 발판을 위한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 대한 관심 역시 러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균형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양자 간, 지역 간, 글로벌 맥락에서 미국이라는 변수에 따라 러시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앞서 언급한 중국 접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러시아라는 요인의 활용 한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19차 전인대 이후 중국의 대러시아 정책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번역: 유정화,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박사  
jh9905@daum.net

- 세르게이 루코닌(S. A. Lukonin) 경제학박사, IMEMO 중국 경제정치부장
- 세르게이 이그나티예프(S. V. Ignatiev) 선임연구원
- 원제: Китай 2017: Год Партийного Съезда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7.12.26)

---

# 남북대화 제안의 감춰진 의도?

---

올레그 다비도프

---

올해 초 주목할 만한 세계적 사건 중 하나는 예기치 않게 시작된 남북 대화이다. 이번에는 김정은이 자신에게는 익숙지 않은 ‘평화 조정자’ 역할로 나섰다. 그는 신년 연설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그는 한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파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며 남북 당국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이 제안에 즉각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물론, 한국을 지지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사전에 이 문제를 협의한 후에). 1월 9일 판문점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열렸다. 여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 응원단, 고위급 대표단, 예술단 등 북한 대표단 파견에 대해 원칙적 합의가 이뤄졌다. ‘대표단’의 체류비용을 남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평소와 다른 발걸음을 내딛은 북한의 구체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마라톤 회담의 성과 자체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보수 정권(이명박, 박근혜) 시기에 남북 양측은 다양한 수준과 여러 채널을 통해 대화하려고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결국 모두 성과 없이 끝나거나 남북 관계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종결됐다. 문제는 북한이 주로 대북 제재 해제와 경제협력 재개(사실상 무상 원조) 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됐음에도,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주제로 남측과 대화하는 것은 단호히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에피소드 하나만 보더라도 남한과 무언가 일을 진행할 때 북한이 얼마나 무례한지 잘 알 수 있다. 2015년 말에 남북 정례회담이 열린 이후 정례회담이 재개되지 못하자 북한은 재빨리 행동노선을 바꿔 강력한 무력시위를 했다. 2016년 1월말 먼저 핵 실험을, 그 다음에는 미사일 실험을 감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 유일하게 가동되는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개성공단을 폐쇄해야만 했다.

북한이 ‘핵 억제력’과 핵 무력을 완성해, ‘세계

적인 핵 강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직후, 남측에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즉, 현 시점에 북한은 '평화로운 휴식기'의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물론, 적들로부터 새로운 '위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자칭 '핵 강국'의 지위는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국제적 고립을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고 대북 제재 모드의 균열을 노리기 위한 대외정치 행보를 필요로 한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남한이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을 했을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논리는 남한의 동포들에게는 단순해 보인다. 즉, "핵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일을 진행하겠는가. 그렇다면 '교양 있는 태도'를 보여주겠다. 아니라면 새로운 도발과 악화된 현실에 대비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동계올림픽 참가가 어떤 의미에서 남한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것이다.

남한은 간단치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 현재로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다는 사실은 북한이 국제행사를 망칠 수 있는 그 어떠한 모험도 감행하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보증과 같은 것이다. 이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양보를 할 용의가 있는 것 같다.

자유주의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은 현 단계에 이미 미래에 대한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있다. 올림픽 참가가 주제인 이번 회담을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상시 가동되는 남북대화 메커니즘 수립의 단초로 삼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가 투 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한 사실은 그들이 미국하고만, 게다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건하에서만 북핵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그 어떤 남북 간 접촉도, 물론 그것이 특별한 현안 해결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에서 주된 걸림돌은 여전히 핵·미사일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며칠 전 동맹국에게 이점을 분명히 상기시켰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한 대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 차관이 미국을 방문했고, 한·미 양국은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에 직면해 경계심을 유지하고 통일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견해가 강조됐다. 한국과 미국 사이를 '갈라놓을' 여지를 북한에게 주지 않는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입장이다.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남북 접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나 일부러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북한 고유의 대화 전략을 고려하면 남북대화 결과는 결코 명확하지 않다.

번역: 김연수, 한국외국어대 강사  
kim-younsoo@hanmail.net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Что стоит за нынешними межкорейскими переговорами
- 출처: IMEMO 시사 논평(2018.1.22)



---

# 북한 핵·미사일 문제 : 현황과 교착상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

---

올레그 다비도프

---

본 논문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현황을 다룬다. 북한 지도부의 군사 기획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 활동도 조명한다. 평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을 대화에 참여시키려는 관련 당사국들의 여러 시도들을 고찰한다.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미국의 제안들과 행동 노선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이유를 분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국의 핵·미사일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북한의 현재 입장에 방점을 찍는다. 현재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깊은 이해관계를 갖는 러시아와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등 '5개국' 간 활동이 조율되지 않고,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관한 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설 협의메커니즘 구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반도 위기는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총체적 문제이다. 그 중에는 사실상 종전되지 않은 한국 전쟁(1950~1953년)이 있는데, 한국 전쟁은 평화 협정이 아닌 (메커니즘이 일부 해체되거나 실패한) 휴전 협정만 체결된 채 끝났다. 그밖에 풀리지 않은 남북관계도 있다. 북한과 한국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만이 한반도 내 한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대표라고 여기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긴장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이며, 북한과 한·미라는 강력한 두 군사 집단이 한반도에서 대치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지난 사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갈등은 북한 지도부가 미국 측의 공격으로부터 '생존'하고 자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실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더욱 심화됐다. 북한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관련 군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발전시켰다. 이와 같이 한반도 위기는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문제의 성격을 띠게 됐다.

북한이 '보복 무기' 개발을 결정하게 된 역사는 단순치 않고,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만큼 오랫동안 관련국들도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 나서도록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도했다.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주를 벗어나지만, 중국과 러시아, 미국, 일본, 북한, 한국의 참여 하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된 한반도 문제 6자 회담이 가장 의미 있는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 중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회담 과정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것은 2005년 9월 채택된 6자회담 공동선언문이며, 그 핵심은 북한에게 일련의 정치적 보장과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달성된 합의 차원에서 북한 지도부는 핵시설 불능(disablement)을 위한 조치를 분명히 취한 한편, 러시아를 포함해 다른 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에 난방유 80만 톤(각각 20만 톤)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을 제공했다. 일본만 자체 판단에 따라 대북 지원에서 빠졌다.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고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은 결국 완전히 결렬돼 끝났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를 논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결국 교섭 불가능한 대상으로 드러났다는 데 있다. 북한은 정치·경제적 지원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억지 구실을 대며 보란 듯이 회담에서 탈퇴했다. 게다가 탈퇴 시점은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하고 관련 검증 절차를 밟기 전이었다.

북한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넘겨줄 생각이 없었고, 지원을 받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회담을 일종의 '유예기간'

으로 활용했다는 데는 사실상 별다른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머지 5개국들의 주요 실수는 이들이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고, 북한의 행동 노선이 분명히 밝혀졌을 때 북한을 강력하게 저지하지 못했다는 데 있었다.

2006년 북한은 이미 (총 6차례 중) 첫 번째 핵 실험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회담 탈퇴 직전에 또다시 위성을 발사했으며, 이후 2009년에는 두 번째 핵 실험을 실시했다.

상기 언급된 일련의 사건 이후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상황은 끊임없이 악화됐다.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은 5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 실험, 다양한 사거리와 등급, 파생형의 탄도 미사일 발사 횟수 증가(2016년 24차례, 2017년 23차례), 미국과 주일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핵·미사일 무기를 사용할 용의가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북한의 성명이다.

국제사회와 관련 강대국들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만성적으로 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면에서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와도 비교될 수 없다. 2009년 초 6자회담이 결렬된 후 회담 참가국들이 실현 가능한 핵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마련한 모든 구상은 사실상 전략적 전망도 갖추지 못한 채 국내 차원의 대비책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다.

북핵 문제를 이해하는 데 근본적으로 원론적 의문이 생겨난다. 국가가 빈곤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름 군사적으로 무장된 나라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값비싼 핵·미사일 무기를 필요로 하는가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 지도부는 어떤 발전 단계에서는 자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협정(혹은 불가침

조약)을 미국과 체결함으로써 자국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으나, 이후 이러한 생각을 버렸다. 여기에는 평화협정을 미국 의회가 비준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온 미국의 입장도 한 몫 했다.

북측이 직접 밝힌 것처럼, 미국은 리비아나 이라크에서처럼 달갑지 않은 정권을 주저 없이 전복시키는데, 그런 미국의 '공격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점차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러한 사고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는 북한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감안할 때 그 저의가 너무 의심스럽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미국 앞에서 북한이 모욕당하도록 남겨둔 적이 없고,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북한의 정권 교체를 결코 좌시할 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남쪽을 보면, 미군 기지와 여러 군사 인프라를 갖춘 한국의 수도 서울은 DMZ로부터 고작 45~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즉, 서울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로켓시스템의 사정거리에 위치한다. 한국이 극도로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북한의 총공격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수년간 한국을 끊임없이 '사거리' 내에 두고, 보복 타격 능력을 유지했는데, 북한의 군사력은 예상되는 대북 공격의 상황에서도 한국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중반 김정일이 취한 노선의 특징은 핵폭탄 2~3기와 관련된 미사일 등 제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갖추으로써 추가적인 문단속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담 참가국들을 의도적으로 속이기는 했지

만, 어쨌거나 그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보여주기 식의 핵·미사일 도박을 줄여 왔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 4~5년간 북한이 실시한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한이 기존의 모든 제약에서 탈피해 핵·미사일 무기 개발 및 고도화 프로그램을 완전히 가동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모든 자원과 기회를 끌어 모아 주변 강대국들에게는 위협적이고, 북한 스스로에겐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이런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강도를 꾸준히 높이는 한편,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선포하고, 헌법과 기타 국가 문건, 당 강령 등에 핵보유국 지위를 법제화하면서 결국 불량국가로 낙인 찍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양자 협력을 둘러싼 회담 어젠다는 실질적 의미를 상실했다. 북한이 핵무장 해제 문제를 그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하면서 실질적 교류의 기회가 전부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이 문제 해결만이 양자뿐 아니라 기타 모든 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결의안에 규정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내용은 주권국들이 군사 부문뿐 아니라, 경제·통상, 외환·금융 및 기타 부문에서 북한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외교 부문에서도 심각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 선포와 뒤이은 모든 후속 조치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정책이 사실상 자주적이고 국가에 중요한 활동에서 군사·국방 분야의 국가 전략을 보장하고 엄호해줄 수 있는 보완적이고 부차적인 활동의 범

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활동에는 국제무대에서 핵·미사일 도박을 정당화하려는 노력부터 군사 부문에서 활용하기 위해 원자재, 혹은 민간 군수 검용 물품 등을 포함해 필수 물적 자원을 (되도록이면 저가나 비상환을 조건으로) 받기 위한 노력까지 포함됐다.

다른 한편으로 북한 지도자들은 핵 도박과 자신들 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대외정책을 ‘핵 억지’ 전략에 대한 대외정책의 종속적 역할을 더욱 심화시켜 왔다.

최근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공격성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조짐을 다음과 같이 목격하고 있다. 2013년 이래 북한은 3차례에 걸쳐 핵 실험을 실시했으며, 파괴력은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북한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핵무기의 양적 증대와 질적 고도화를 지속하겠다고 꾸준히 밝혔다.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 김정일 통치 시절 이런 실험은 일회성 성격을 띠었고, 주로 미사일 발사 능력에 대해 주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면, 최근 몇 년간 상황은 급변했다. 2016년에 북한은 다양한 등급과 파생형의 대규모 미사일 시험에 착수했다.

액체연료 로켓과 취약한 고정식 발사대 대신 고체연료 로켓과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로켓 개발 및 실험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 의도는 최대한 신속하게 발사를 준비해 가능한 한 적국의 눈에 띄지 않고 기습적으로 발사하기 위함이다.

북측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발언이 눈에 띄게 거세졌다. 북한은 군사적 위협 발언을 할 때

그 어떠한 자제력도 발휘하지 않았고, 이런 행보는 평화보다는 전시를 앞둔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에 더 가깝다.

북한 외무성은 성명 발표와 공식 보도문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심지어 호주 등 북한의 정책을 크게 비판하는 다른 국가들까지 잣대미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한다. 또한 북한은 미국 본토와 괌에 대한 핵 타격 계획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밝힌다. 우리는 이런 발언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허풍이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장은 역시 크게 고조된다.

현 단계에서 주변국들은 압박과 회유책을 결합해 북한으로 하여금 위험한 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아직 성과는 없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는 점을 인정했다. 북한은 내부 선전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미국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을 크게 비난하고 있다. 한편, 미국 스스로도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들에게 모순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적절한 도구를 모색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북한 스스로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나 최소한 동결로 이어지는 그 어떠한 아이디어도 제안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11년 8월 김정일은 마지막 방러 중 마지못해 핵문제 해결에 있어 6자회담 포맷이나 모두가 수용 가능한 포맷을 통해 회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6자 회담에 북한이 참가했다는 사실에서 보여주듯이, 김정일이 핵·미사일 ‘상품’을 주로 상대국과의 흥정 대상으로 활용했다면, 김정은에

게는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 그가 의도하는 목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나 기타 상대국들과의 대화나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을 위해서라면 못 할 것이 없는 '위험한 강대국'으로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고 주안점으로 두고 있으며, 이런 목표는 도발 행위를 통해 주기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 때 '최고 존엄'은 본질적으로 아주 원시적인 대치 전술로 무장한다. 바로 '나는 미쳤으니 건들지 마시오. 해를 가하면 큰 지옥으로 펼쳐질 것이고, 내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그나마 작은 지옥으로 끝날 것이오'와 같은 전술이다.

그에 따라 핵·미사일 해체에 대한 합의가 목표가 될 수 있는 다자간, 혹은 기타 회담에 대한 제안이 무조건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도리어 북한은 앞으로도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북한이 미국과 논의할 용의가 있는 유일한 안건은 소위 대북한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인데, 이 안건은 북한이 그나마 자제력을 갖는 동기가 부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한반도 인근 지역에서 모든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 국경 근처에서 핵무기 운반체 감시를 위한 근접 비행을 포기하며, 결국에는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럴 경우에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 동결 등 일부 양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사실상 상상하기 어려운 양보를 한다고 가정해도, 북한이 불리한 국제 여건 하에서 자신들의 국가 안보와 생존의 유일한

보장 장치로 간주되는 핵·미사일 무기를 포기하게 하는 동기 부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북한은 글로벌 핵무장 해제 과정이 시작되고 진전될 때에만 비핵화를 준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이 취하는 공격적 행위가 충동적이고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북한이 취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4년도 더 지난 과거에 채택된 군사 계획들을 꾸준히, 그리고 엄격히 이행하는 차원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2013년 3월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 승인됐다. 후자의 전략적 목표 차원에서 초정밀 소형 핵탄두와 그 운반체 생산 및 장거리 추진체 개발에 대한 야심차지만 매우 구체적인 과제가 설정됐다.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상시적인 핵능력 보유와 끊임없는 군사적 핵능력의 고도화 문제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이 조항은 후에 북한 헌법에 포함됐다). 이 때 핵무기는 '그 어떤 국제회담의 어젠다에도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북한은 전 세계에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자신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김정은이 '긴급 작전 회의'에서 광과 하와이 미군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조선 인민군의 전략미사일을 활용해 공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최종 계획'에 서명했다는 정보가 발표됐다. 이 정보에는 지금부터 한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가 끝났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모든 문제는 앞으로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 이 정보

는 전혀 기밀사항이 아니며, 당시 북한의 공식 발표 자료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관측통들이 언급하는 북한 지도부의 거의 모든 최근 행보는 전혀 즉흥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상기에 언급된 계획들의 준비 작업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행동을 ‘생존 투쟁’이라고 부르기에 분명 어폐가 있다. 북한의 행동은 다른 범주에 더 어울린다. 즉 북한의 행보는 공격할 의사를 갖고 외형상으로는 ‘자기 방어’를 구실로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것에 가깝다.

이 모든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전문가들이 북한이 가하는 위협의 실질적 파라미터를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강요한다. 개탄스럽게도 현 단계에서 북한의 비교우위는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없다는 데 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르는 것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 수준이다. 북한이 지난 1년 6개월에서 2년 사이 더욱 강력한 신형 미사일 엔진 실험과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 그리고 이동식 발사대를 통한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며 이 영역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사거리 보장이나 탄두의 성격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사실 북한은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보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2017년 11월, 고작 한 차례 성공했을 뿐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미사일 제어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재진입 운반체(reentry vehicle)를 실제로 개발하기에는 북한의 기술 수준이 낮다고 본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북한으로서는 사거리가 1,300km 미만인 노동 미사일급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이 최선이다.

두 번째, 핵능력 현황이다. 북한은 이제까지 지하 핵실험을 총 6차례 실시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원료로 핵탄두 10~16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하는 플루토늄 프로그램 이외에도 고농축 우라늄에 기반을 둔 군사 프로그램이 존재할 것이라는 예측이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이 경우 탄두 숫자는 3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최근 미국 전문가들의 몇몇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핵탄두가 70기가 넘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추산은 실제로 크게 과장된 것일 개연성이 크다. 순수한 ‘이론적’ 계산 외에는 정말 북한이 폭발 장치 실험에서 군사적 목적의 탄두 생산 단계로 접어들었는가에 대해서도 이를 보여주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과학 및 산업 장비와 기술력으로 과연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장착할 소형 핵탄두 개발에서 진척이 이루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원론적 질문이다. 북한 스스로는 그러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간주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의 실제 규모가 크게 과장됐다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다. 완전한 핵 억지력을 구축했다는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일하게 입증 가능한 사실은 북한이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중거리 미사일 생산과 발사 능력을 확실히 갖추고 있다는 사실 뿐이다. 북한은 핵탄두

가 탑재된 완전한 초정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문제와 잠재적 적국에 대량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하는데, 의심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 북한의 경제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고, 열악한 경제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업 기반이 분명 부재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상기에 언급된 모든 것을 감안해보면, 북한이 실제로 이룩한 핵·미사일 부문의 괄목할만한 진전은 북한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자주적 성과일리 없다. 우리는 이런 성공 요인이 보이지 않는 해외로부터의 기술 이전과 비밀리에 이루어진 선진국 숙련 전문가들의 개발 작업 참여, 그리고 복잡한 방식과 채널을 가동시킴으로써 북한이 필요한 원료와 물품, 노하우를 수입한 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및 핵무기 생산에 관한 기밀을 최고 등급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철저히 해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부문에서 새롭고 질적인 도약을 할 가능성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원이 극히 제한돼 있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외화 및 상품 유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질적인 도약을 가속화하려고 성급하게 시도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끔찍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북한 지도부가 내릴 최종 선택을 예측하기란 매우 어렵다.

군사 위협 가능성을 제외하면 북한의 군사 활동(방사능 오염, 다른 국가의 영토나 영해에 미사일 일부나 파편 추락)과 관련한 대규모 인재(人災)

가 우려된다. 북한의 모험과도 같은 이런 행동에 당연히 러시아를 포함해 주변국 국민들이 위협받고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의 핵 실험장에서 실시된 소위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뚜렷한 지진의 진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또한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포괄적 핵실험금지기구’(CTBTO)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 현상은 핵폭발 이후 발생하는 지압과 관련이 있었다. 더욱이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강력한 핵폭탄 위주로 핵실험을 지속할 경우, 핵 실험장 인근 산이 실제로 붕괴될지 모른다. 일부의 전망에 따르면, 산이 붕괴되면 최악의 경우 죽음의 방사능 구덩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며, 이는 인구 밀도가 높은 동북아 지역의 모든 생물체에 치명적인 상황을 야기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인재 발생 위험은 강도가 높아져만 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실험이 야기하는 실질적 위험은 실험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가 훼손·붕괴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거대한 군사 및 대외정치 야욕을 가지고 있는 다른 개도국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전례가 된다는 데 있다. 개도국들이 글로벌 위협 속에서, 또한 역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경험’을 자신들의 국가안보 보장에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여길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이런 위기 해결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한 현실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모두에게 적용되는 분명한 사실은 지구력 전술이 지속된다고 해도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는 점이다.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으로 미뤄보았을 때, 한반도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교착 상태로부터 빠져나올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서방 세계와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진전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고, 이러한 기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 있었다.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전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에 따르면 오바마가 고집했다고 하는 '무대응' 정책으로 인해 오바마 재임 시절 북한은 사실상 탄도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에서 별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대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 관료들은 대통령 취임식 이후 강경한 어조로 일련의 성명을 발표했고, 그 주된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수년 간 실시한 '전략적 인내' 정책이 완전히 끝났으며, 미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북한의 핵·미사일 야욕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한 이웃국인 북한에 대해 중국이 필요한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4월 초 플로리다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그 시기 북한이 다양한 등급의 대규모 군사 로켓 실험을 실시하면서 미국은 여러 대응책과 '보복 조치' 구상을 서둘러야겠다는 마음을 더욱 더 굳게 먹었다. 이러한 대응책 중에는 괌 기지에 배치된 중폭격기와 태평양 함대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활용해 북한 군사시설을 공격할 가능성과 북한의 군사 인프라에 손상을 입히고, 이를 파괴하기 위해 특수작전 및 사이버공

격 실시하거나, 특수부대로 북한의 군·정치 지도부를 장악하거나 '제거'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이전 행정부의 여러 군 관료들은 무력 행위에 거세게 반발했다는 사실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파네타 전 국방장관은 지나치게 강경한 표현과 무력 도입 위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부 분석가들은 미 국방부가 '시리아 사례'와 달리 북한 군사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설이 파괴된다 하더라도 리스크가 감소할 리 없고,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북한은 한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보복 공격은 견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거 하에서 미국은 뒤로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언급해 둘 필요가 있는 사실은 그 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Tillerson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정치인들이 성명 발표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가 목표가 아니며, 북한의 체제 붕괴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포기하는 '정상 국가'가 되면 관계를 맺을 용의가 있다고까지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 및 가까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제재를 의미하는 '평화 압박' 전술을 폭넓게 활용할 것이고, 그 강도는 북한의 구체적 도발 행위에 달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특정 상황 하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사 옵션을 취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미국은 북한을 매우 위험하고 변덕스러운 국가로 여기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선택 안에 미국의 군사



력 개입 계획도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미국 영토나 다른 국가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고 가정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보복 타격의 합당성 문제는 논외이며, 보복 공격은 즉각 단행될 것이다).

북한의 지휘부, 군사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이나, 나아가 지상군 전력을 활용한 대규모 군사작전 실시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보아하니 이러한 옵션 또한 마련되고 있지만, 이들을 실질적으로 가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 한반도와 동북아 전반에 미칠 파장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최우방국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역내 대다수 국가가 이러한 시나리오에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올해 1월에 열린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키신저가 미국의 일방적 대북 조치를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는 점이다. 그는 “선제 타격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유혹은 크다. 그러나 나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지지하지 않을 일방적인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를 미국 정부에 조언하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2~3년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공조를 강화하는 추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사실상 이러한 공조 메커니즘은 2015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된 동북아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양국 외무차관 회담을 통해서이다.

그때부터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 건설

적인 노선을 선택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북한 지도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양국의 호의가 담긴 제안들은 외무장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정상급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조치는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았고, 사실상 북한의 외면을 받았다.

북한과 중국의 다음 행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는 것이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중국 외교부장의 모스크바 방문 시 제안돼 작년 7월 4일 양국 외교부 공동 성명의 형태로 발표됐다. 이 성명에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한미 대규모 군사연합훈련 중단)’과 ‘쌍궤병행’에 대한 중국 측의 제안과 한반도 문제의 단계적 해결에 대한 러시아의 아이디어가 포함됐다.

대립 당사국들은 ‘동결’ 실시와 병행해 회담에 착수하고, 공동의 상호관계 원칙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러한 원칙에는 무력과 침략 포기, 평화적 공존, 핵문제 등 여러 문제의 종합적 해결을 목표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려는 의향 등이 포함된다. 다른 한편으로 성명문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당사국 간 관계 정상화를 보장하는 평화 및 안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대화 프로세스를 재개하려는 러시아의 오랜 계획이 언급됐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의 모든 당사국이 갖는 우려와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전략에 입각해 행동을 취했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 갈등의 요인들이 꽤 누적됐기에 양국은 ‘원원전략’ 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 계획을 마련해 제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고로 말하자면 추진되는 계획은 본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러시아 외 교부는 21세기 초에 실패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계획 속에서 되살려 놓았을 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미 2003년 1월 12일 평양에서 열린 회담에서 러시아는 현재의 이니셔티브와 같은 내용인 한반도 문제의 일괄타결방식을 제안했는데, 당시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유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다름 아닌 북한이 우리의 노하우에서 그 어떠한 이점도 찾지 못한 채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지난 역사가 새로운 국면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공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 심지어 한국에서 나온 평가 중 대부분은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현재 대치하는 당사국들이 공유하는 문제들이 모든 측면에서 심각하게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밖에 파트너 국가들에 따르면 더욱 위험해지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등 급변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인해 세계평화와 안보에 주된 도전 요인인 북핵 문제야말로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핵동결이 이루어질 경우 그 자체가 불법인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국제법을 전적으로 준수하는 한미 군사훈련을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계기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키신저 또한 이 주제에 대한 발언을 마무리하며 한미 군

사훈련의 중단을 대가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자는 러시아와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한미 군사동맹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현 상황을 분석해 보면, 오늘날 북핵 문제는 2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현재 그 어떠한 국가도 모든 당사국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북핵 문제 해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귀결된다. 더욱이 지난 몇 년간 상황은 매우 복잡해졌는데, 그 이유는 북한 새 지도부의 노력으로 2000년대 초 매우 원시적이었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강력한 '성장 동력'을 얻었으며, 북한의 지위가 역내 세력의 주요 균형요인으로 규정지을 만큼 발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생각은 북한의 능력을 커다란 역내 군사위협으로 평가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북한은 선진국뿐 아니라 심지어 중견국보다도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에, 북한을 잠재적으로 위협한 침략국가라고 하기보다는 '말썹꾸러기'로 보는 편이 더 옳다. 그러나 모든 문제는 불안정이 잠재돼 있고 정치·경제적 붕괴의 경계에서 만성적인 줄타기를 하는 전체주의 국가 북한에서 핵무기가 생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권력을 둘러싼 공공연한 내분과 갈등과 같은 무질서한 상황이 북한에서 발생할 경우, 핵무기 및 핵물질이 무책임감 테러집단의 손에 들어갈 위험도 크다.

외부 요인의 역할에 대해 말하자면 러시아와 중국, 미국 등 영향력 있는 당사국들이 범했던 가장 큰 실수는 이들의 내부 모순으로 인해 애초에 최소 노력으로 무력화될 수 있었던 북한

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통제를 사실상 상실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6자 회담이 결렬된 지금 북한의 상대국인 5개국(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사실상 두 진영으로 분열됐다. 한쪽 진영에는 북한과 미국에 반반씩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 북한의 군사적 역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노선을 취하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다. 다른 한쪽 진영에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있는데, 이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무장해제에 대한 완전한 협상에 나설 때까지 포괄적이고 무제한적인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고 주문한다.

물론 한반도 내 군사·정치적 긴장을 해소해 줄 합리적 방안은 오로지 대화뿐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 용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국들은 이런 교착상태에서 조연이나 인질 역할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서 언급해둘 필요가 있는 것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가장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러시아,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등 '5개국' 간 활동들이 상호 조율되지 않고, 서로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에 개방된) 5개국 간 상설 협의의 메커니즘이 구축된다면, 한반도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게다가 이런 대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한반도 핵·미사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과정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번역: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올레그 다비도프(O. V. Davydov) 前러시아 외교부 특임대사

· 원제: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РАКЕТНО-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СОСТОЯНИЕ, ТУПИКИ, ВОЗМОЖНЫЕ ПУТИ РЕШЕНИЯ

※ 본 논문은 '세계경제·국제관계' 학술지의 승인을 받아 2018년 4~5월에 게재될 예정이다.

---

# 동남아시아 경제 지역주의의 디지털 단계 : 러시아의 시각

---

예브게니 카나예프

---

본 논문에서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아세안(ASEAN)에 미치는 영향들을 다룬다. 아태 경제 지역주의의 특수성들을 언급하고, 아세안경제공동체 창설 전후로 동남아시아 다자간 경제협력의 발전 과정과 경제협력이 디지털화되는 상황에서 ASEAN이 직면하는 여러 도전들을 밝히고자 한다. 아세안경제공동체는 여전히 아태 협력의 통합 바로미터가 모이는 몇 안 되는 집단 중 하나이지만, 향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경쟁력 제고 여부는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의 여러 도전에 대해 ASEAN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동남아시아 경제 지역주의는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창설되면서 반영됐으며, 아태 지역에서 이와 유사한 과정들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향후 ASEAN이 경제공동체 발전과 관련해 성공을 거둘 수 있는지는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가 될 역량을 ASEAN이 갖췄는가에 달려 있는데,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 오늘날의 아태 경제 지역주의

오늘날 아태 경제 지역주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통상·투자 자유화라는 어젠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역내 연계성 증대를 위한 조치에 관심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첫 번째 특징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기존의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들이 실현과정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아태지역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이다.

아태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적 성과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FTA 협정 체결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초중반에 처음으로 생겨났으나, 그 성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태 전문가들 사이에서 통상 '스파게티볼'이라 불리는) 동시다발적 양자간 FTA가 다자간 이니셔티브 실현을 가로막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전문가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결과, 통합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단일한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것조차 방해하는 조각난 협정 '줄무늬'가 생겨나게 됐다. 국가 간 의사소통 발전이나 효율적인 제도, 국민들 간 높은 교류 수준 등 다자간 협력을 위한 제반 여건이 부재한다. 그에 따라 양자뿐 아니라 다자간 자유무역에 대한 합의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아태국가들이 통합 요소를 갖춘 새로운 협력 어젠다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APEC이 2010년까지 선진국들 간 무역 및 투자 자유 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인도네시아 보고르선언의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새로운 협력 어젠다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그 결과 소위 '역내 연계성 증대'가 주요 협력 방향이 됐으며, 이 협력 방향은 ASEAN과 APEC이 지속 가능하고 다변화된 경제 교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2010/2016,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 결과 발표된 상호연계성

증대를 목표로 하는 '베이징 로드맵'이 있다.

이미 조율돼 마련 중인 경제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디어에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에서 그 공백이 가장 크게 보인다. '양질의 포괄적' 협력 사례인 TPP는 아태지역 내 리더십을 추구하는 미국의 볼모로 더욱 노골적으로 변모하며 정치적 성격을 급속히 띠게 됐다. 미국이 탈퇴한 후에도 TPP가 이론적으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미국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자국의 리더십 야욕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는 미국과 TPP 회원국들 간 양자 협력 활성화이다. FTAAP에 대해 말하자면, 기존의 FTA 참가국들이 이해관계를 놓고 경쟁하고, 역내 법적 기반이 다양하기 때문에 FTAAP가 구축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대만을 독자적인 협력 참가국으로 간주하고 협상하는 것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아태 경제 지역주의 발전에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ASEAN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ASEAN은 특히 항만 인프라를 비롯해 회원국들의 인프라에 대해 중국이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더욱이 중국의 대동남아 정책이 활성화되면 일본과 한국, 인도의 대동남아 정책 또한 당연히 촉진될 것이며, 그 결과 ASEAN 회원국들은 투자 및 기술 유입을 확대하고 다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의 정치적 파장은 ASEAN의 향후 계획에 모순이

될 수 있다.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들 내 전문가 집단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정책을 기반으로 해 ‘안보’와 ‘개발’ 개념을 통합시키며 독자적인 대륙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ASEAN 지역안보포럼이나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같이 아태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ASEAN 중심의 대화 포맷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ASEAN과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 간 협상 타결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사실도 이 문제에 추가적으로 심각성을 부여한다. RCEP은 아태 지역이 ‘원동력’인 ASEAN과 체결한 역내 다자간 프로젝트다. 현재 이들 사이에 공식 협상이 20차례 열렸고, 협상 기한은 두 차례 연장됐다.

아태 경제 지역주의와 관련해 주요 이니셔티브들의 향방이 불투명한 현 상황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야말로 그나마 온전한 경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 ASEAN은 서두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차근차근, 목표 지향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다자간 프로젝트로서의 아세안경제공동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존의 여러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가 실현된 결과 아세안경제공동체 프로젝트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5개 회원국으로 시작해 이후 10개국이 소속된 ASEAN은 유럽의 통합 경험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았고, 통합을 위한 협력의 초기 조건과 발전 맥락이 유럽과 동남아

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유럽경제공동체(EEC)는 처음에는 경제연합으로 시작됐으며, 정치 요소는 후에 ‘편입’됐다. 반면 ASEAN은 애초부터 동남아 지역에 공산주의 전파를 막자는 정치적 과제를 설정했으며, 경제 프로젝트는 1990년대 초반에서야 비로소 시작됐다. 로마 조약의 조인을 앞둔 유럽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반면, 방콕 협정 체결을 앞둔 동남아에서는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했으며, ASEAN의 미래 회원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군사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다. EU의 이민정책 실패와 EU와 유로존 회원국들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 그리고 무엇보다도 브렉시트로 인해 ASEAN 회원국들은 유럽의 경험들을 선별적으로 고려해 동남아 현실에 적용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했다.

실용주의를 최우선 협력 방향으로 잡은 ASEAN 회원국들은 경제 및 안보 노선 정책을 통합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이들을 분리하기도 했다. 경제협력에 대한 ASEAN의 관심은 ‘칸수보고서(Kansu Report)’에 반영됐고, 동남아시아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에 대한 선언문 채택과 맞물렸다. 한편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창설에 대한 계획이 선포되면서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가동에 대한 결정 또한 내려졌다. 아세안물품무역협정(ASEAN Trade in Good Agreement, ATIGA)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외연이 확대되고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담 포맷이 구축된 바로 그해에 체결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게다가 ASEAN은 정치와 경제 간 경계를 극히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과 동시에 체결됐다.

아세안경제공동체를 향한 움직임은 1997년에 ASEAN이 'ASEAN VISION 2020'을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ASEAN은 아세안경제공동체를 2020년까지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그로부터 4년 뒤 기한을 2015년으로 앞당겼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2015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다.

- 동남아시아 지역에 단일 시장 및 생산 기반 구축
- 경쟁력을 갖춘 경제지대로의 변모
- 동남아 국가들에 동등한 개발 조건 제공
-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ASEAN은 마지막 두 목표는 이미 전적으로 이행됐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는 각각 92.4%, 90.5% 정도 달성했다고 밝히면서 '이음새가 없는' 동남아 경제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인프라 개발 노선에서 '10개국'이 보인 격차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업계 종사자 중 고작 1.5%만이 서비스 교역 자유화를 누렸고, 나머지는 법률 체계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그레이존'에 남게 됐다. 결국 2017년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순위에서 ASEAN 회원국들 간 격차는 2위(싱가포르)와 171위(미얀마)로 벌어지게 됐다.

ASEAN은 이 같은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두 가지 방향에 노력을 집중했다. 첫 번째 방향은 업그레이드된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 창설 기한이 2025년으로 연장되면서 ASEAN은 협력 방향을 4가지에서 5가지로 확대했고, 이를 아세안경제공동

체 청사진 2025의 '글로벌 ASEAN' 장에 포함시켰다. ASEAN이 글로벌 프로세스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대화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며, 세계경제 문제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마련해 역내 및 글로벌 다자간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겠다는 본질적 변화가 있었다.

두 번째 방향은 ASEAN 내부 차원의 협력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2016~2017년에 채택된 아세안경제공동체 구축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를 정리해보면, '모범규제관행에 대한 ASEAN 실무 계획'(ASEAN Work Plan on Good Regulatory Practice)과 '아세안조세협력전략계획 2016~2025'(Strategic Action Plan 2016-2025 for ASEAN Taxation Cooperation)를 협력 방향으로 꼽을 수 있다. 2017년 2월에는 AEC 2025 통합 전략(AEC 2025 Consolidated Strategic Action Plan - CSAP)이 채택됐고, 그 목표는 투자자들에게 아세안경제공동체의 특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2016년 8월에 채택된 상품 운송 원활화를 위한 기본 협정(AFAFGIT: ASEAN Framework Agreement on the Facilitation of Goods in Transit)은 실현 전망이 밝다. 2017년 3월 ASEAN 경제장관들은 2020년까지 상품거래 비용을 10% 낮추기로 합의했다. ASEAN은 통상 협력 데이터베이스인 아세안무역기록관(ASEAN Trade Repository)과 아세안관세검색엔진(ASEAN Tariff Finder), 아세안무역원활화지표(The ASEAN Seamless Trade Facilitation Indicators - ASTFI)를 구축했고, 이는 '10개국' 사이에, 그리고 ASEAN+1 포맷에서 ASEAN과 파트너국들 간 교역을 용이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협정을 실현할 때 회원국 기업들

간 초국경 협력 문제를 해결해줄 협의 메커니즘인 ASEAN 투자, 서비스 및 무역 솔루션(the ASEAN Solutions for Investments, Services and Trade - ASSIST) 제공 시스템도 생겨났다.

ASEAN 회원국들 간 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니셔티브 중에는 ASEAN 지적재산포털(Intellectual Property Portal)과 아세안전자상거래조정위원회(ASEAN Coordinating Committee on Electronic Commerce - ACCEC)가 있다. 포털과 위원회는 지적재산과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추고 있다.

ASEAN은 회원국들 간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6년 9월에 ASEAN 통합 이니셔티브 제3차 워크플랜(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Work Plan III)을 채택했다. 본 문건은 식량 생산과 농업, 무역 원활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발전, 교육, 보건 그리고 국민 복지 향상과 같은 부문에서 회원국들이 다자간 협력을 실현하는 과정에 베트남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 9월에 ASEAN은 '포용적 비즈니스' 프레임워크(ASEAN Inclusive Business Framework)를 제안했다. 본 프레임워크는 회원국 기업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상품과 서비스, 복지를 유료로 제공하는 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고로, 아세안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10개국'이 과학·기술, 포용적 성장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ASEAN 혁신선언(ASEAN Declaration on Innovation)을 채택했다.

ASEAN은 비록 극적인 돌파구는 없을지언정 꾸준히, 그리고 목표 지향적으로 경제공동

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이 ASEAN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ASEAN의 대응도 추적할 필요가 있다.

## ASEAN과 4차 산업혁명, 기회와 도전

4차 산업혁명이 ASEAN에게 주는 기회와 도전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먼저, 기회에 대해 말하자면, 규모의 경제를 자본화할 수 있는 부문에서 자영업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을 언급해둘 필요가 있다. 이들의 활동 기반은 생산보다는 전문 서비스나 고부가가치 상품이 될 것이다. 현재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대중 저널리즘, 리얼리티 쇼, 이색적인 비디오 블로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동남아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도 생략할 수 없다. 이 지역에서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89%에서 99%로, 이들은 총 52~97%의 고용을 담당한다. 이 지표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에서 중소기업이 갖는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규 투자자들을 동남아 밖에서도 모색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의 재난 예보 및 피해 복구 능력이 제고될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진이나 쓰나미, 홍수 피해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진보한 전파 탐지기기를 통해 산사태에 깔린 사람들을 찾아내는 일이 가능해지고, 드론을 이용해 이재민들에게 식량이나 식수, 의약품 등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교통 인프라가



낙후한 동남아 농촌 지역에 있어 중요하다.

이제는 주요 도전에 대해 살펴보자. 4차 산업혁명 때문에 ASEAN은 기존의 '성공 신화'에 견줄만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동남아 국가 경제 현대화의 근간을 이루는 여러 가지 수출지향 산업 요소가 온라인 감독 체계로 이동할 수 있다. 여러 평가에 따르면, 자동화된 산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는 각각 60%, 73% 줄어들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베트남과 태국의 일자리 중 약 60%가 자동화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캄보디아의 섬유, 의류, 신발 산업 부문에서는 각각 64%, 86%, 88%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 소매업 부문에 대해 말하자면, 태국에서는 68%, 캄보디아는 71%,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각각 85%, 88%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다. 사실상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동남아로 생산시설을 옮겼던 전통적인 '아시아 경공업'의 종말을 의미한다. 향후 3D 프린트가 발전하면 주요 생산지 인근에서 필수 부품이 직접 생산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용주 등이 비용을 들여 투자와 기술을 이전하고, 인적 자원의 숙련도를 제고하면서까지 굳이 동남아 지역의 생산 현지화에 나설 필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실직자 문제는 골치 아픈 사회문제가 될 것이며, 반면 엔터테인먼트 산업 종사자들은 고용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 수를 더욱 늘리면서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분노를 크게 야기할 것이다. 자신의 처지가 불만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많은 실직자들은 시위에 쉽게 동원될 수 있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

그밖에 현재 동남아 국가들이 디지털 경제 서비스에서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도 제법 중요하다. 미얀마와 라오스 인구 중 26%만이 인터넷 접근이 가능하다(동남아 평균 53%). 동남아 총 인구 중 약 70%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고작 5%만이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ASEAN 회원국들의 인프라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며, 이러한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나 역량이 없다는 점이다.

동남아는 전자 상거래 규모 면에서 경쟁국들에 크게 뒤처진다. 현재 동남아 지역의 전자 상거래 규모는 90억 달러로, 1인당 14달러 수준이다. 중국은 전자 상거래 규모가 4,260억 달러로 1인당 규모는 327달러다. 동남아 국가들은 거대한 세계 IT 산업과 경쟁을 가능케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없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구글은 PPC 광고의 90%를 담당하고, 페이스북은 SNS 트래픽의 77%, 아마존은 전자책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과 조금이라도 견줄만한 가능성을 갖춘 기업들이 ASEAN에 생겨날 가능성은 낮다.

동시에 ASEAN은 기존 지역주의 프로젝트의 향후 발전노선을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완제품을 수출입하는 대신에 가상 상품이 거래되는 여건 속에서 완제품의 디자인을 거래하고, 필수 부품을 신속하게 생산하기 위해 3D 프린트 기술을 활용한다. 이로 인해 ASEAN은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문제에 봉착한다. 어느 한 회원국에 속한 기업이 가상 상품을 구입해서 자국에서 3D 프린트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손해

를 보게 된다면, 누가 이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교역과 같은 부문에서 의료 기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상호인지협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에 해당하는 노동인구 비중이 고작 1.5%에 불과하고, 외국인 노동자 중 87%가 비전문적 분야에 종사하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간적 압박을 극복하며 전문 인력의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가상 상품의 교역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조세 정책과 사회보장은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AFTA나 ATIGA와 유사한 ASEAN 경제 지역주의 프로젝트들의 법적 기반은 얼마나 자주 쇠신되어야 하는가?

전반적으로 ASEAN은 종속적인 플레이어로서 4차 산업혁명에 편입되고 있다. 오늘날의 시스템에서 ASEAN은 동남아 지역의 경쟁력을 단일한 지정학적 공간 수준으로 급속하게 끌어 올리고, 회원국들 간 온라인 경제 접근에 대한 격차를 빠르게 좁히는 데 필요한 필수 자원이 충분치 않다.

## 결론

오늘날 아태 경제 지역주의는 역내 단일 협력의 장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를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프로젝트들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발전함에 따라 아태국가들 간 관계가 더욱 양극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더하면, 다자간 협력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들을 조율하는 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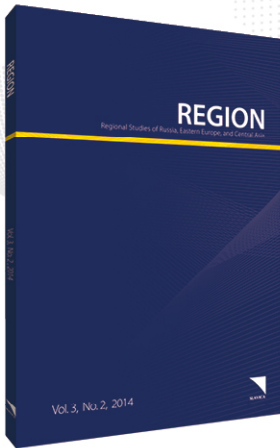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아세안경제공동체는 단일 협력의 장이 구축돼 비교적 성공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드문 사례 중 하나다. 여기에서 국가든 다국적 기업이든 간에 경제 주체들이 아세안경제공동체 공간에서 협력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러나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조정자인 ASEAN이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고, 현재 회원국들 간의 개발 불균형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 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하는 것은 중단기적으로 ASEAN의 정책적 특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해 볼 수 있다.

번역 : 강규은,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석사

kge77@naver.com

· 예브게니 카나예프(E. A. Kanaev) 역사학 박사, ИМЕМО 아태지역연구센터 수석연구원  
· 원제: ЦИФРОВОЙ ЭТАП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ЕГИОНАЛИЗМА В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ВЗГЛЯД ИЗ РОССИИ



# REGION

REGION is a peer-reviewed international journal that explores the history and current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affairs of the entire former Soviet bloc. In particular, the journal focuses on various facets of transformation at the local and national levels in the aforementioned regions, as well as the changing character of their relationships with the rest of world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 Russia·Eurasia Focus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가 매주 발간하는  
「주간 Russia-Eurasia Focus」는 러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담은 온라인 칼럼입니다.



# 2018

Vol.2 | No.1 Spring

## Russia Policy Review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031-330-4852 FAX.031-330-4851  
81, Oedae-ro, Mohyeon-eup,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17035, Korea <http://www.rus.or.kr>